

한국경제 양극화를 둘러싼 제도적 배치와 정치 변화

2024. 06.

강원대학교

정준호

I

양극화 또는 이중화 문제 설정

이중화 vs 양극화

- Emmenegger et. al.(2012)는 이중화와 양극화를 구분
 - 양극화는 노동시장에서 중간 숙련 또는 사회계급에서 **중산층이 사라지는 것**
 - 이중화는 **내부자와 외부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구분하는 것
 - 이중화는 **과정이자 산출**이지만, 양극화는 **결과**임.
 - 개별 수준에서 논의되는 양극화와 달리 이중화는 제도적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정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이중화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탈숙련화**
 - 숙련편향적인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ical change)는 IT기술 진보와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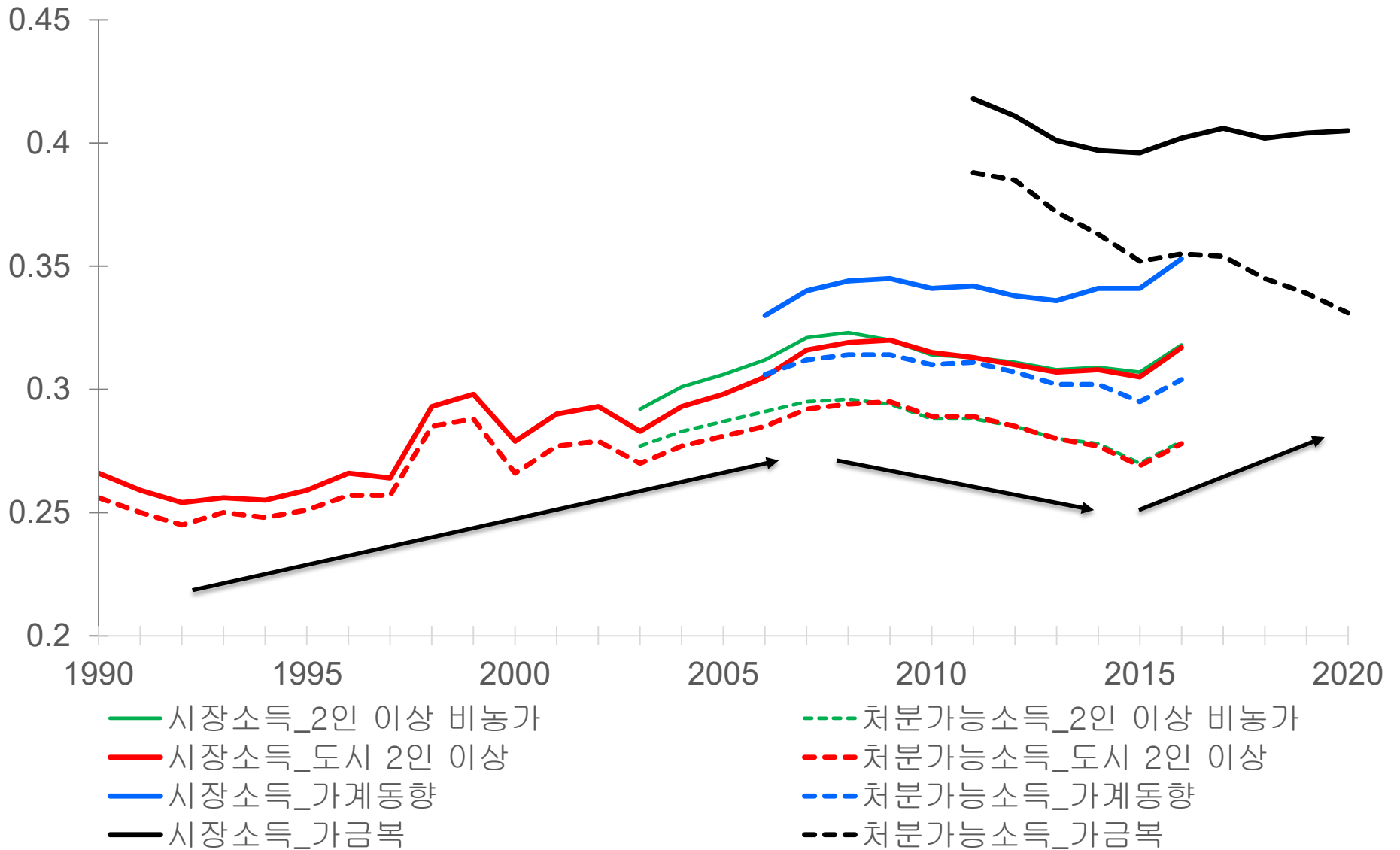
이중화 vs 양극화

- 이중화의 구조적 요인으로서 **탈숙련화**
 - 기술진보는 고숙련과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와 같이 **비루틴(non-routine)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수요 증대, **반면 중간 숙련 일자리 수요는 점차 감소**
- 서구 사회민주당이 직면한 **선거 딜레마**(Rueda, 2005)
 - 현행 상태를 유지하려는 내부자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와 외부자를 통합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사회적 보호 체제를 개혁할 필요가 **동시 제기**
 - **내부자**: 정규직 고용, 고임금과 높은 사회적 보호, 조직된 정치적 참여
 - **외부자**: 비정규직,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보호, 제한적인 정치적 참여

II

양극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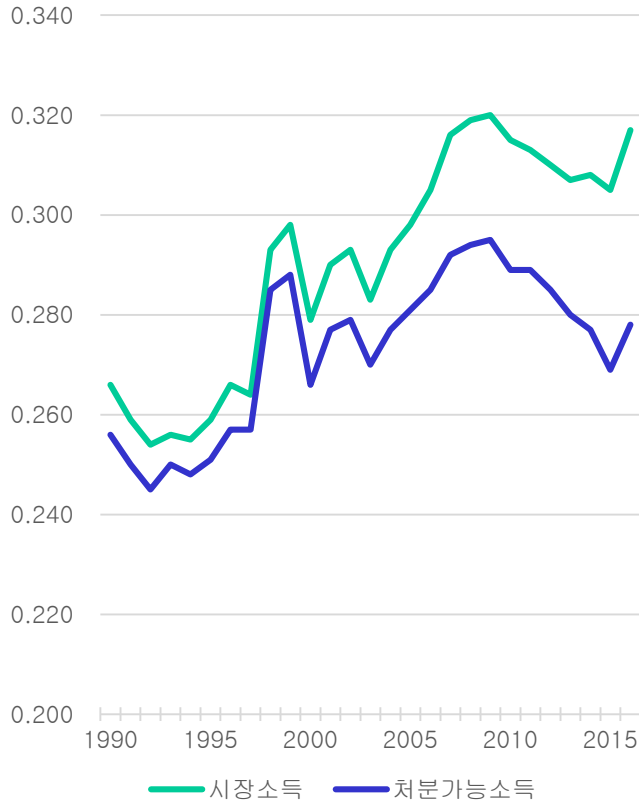
균등화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지니 계수의 전반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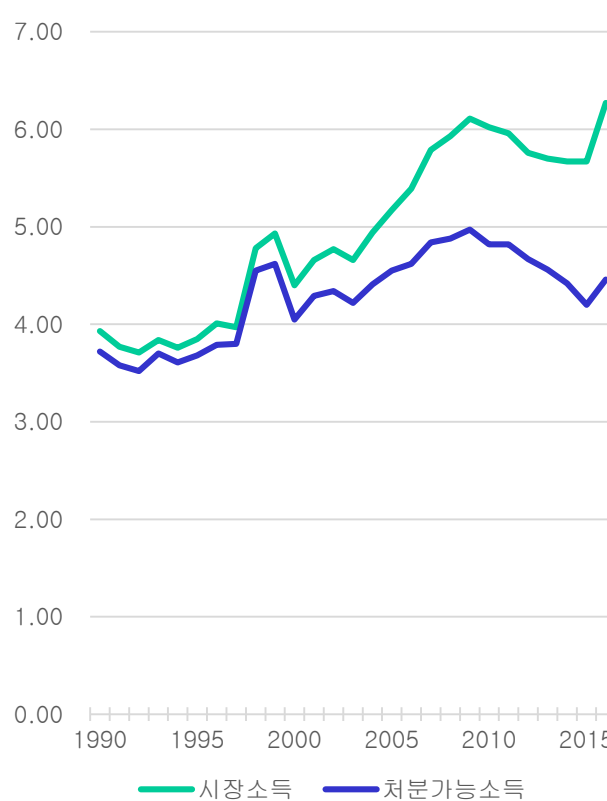
균등화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불평등과 양극화 간 동행

도시 2인 가구: 1990-2016년(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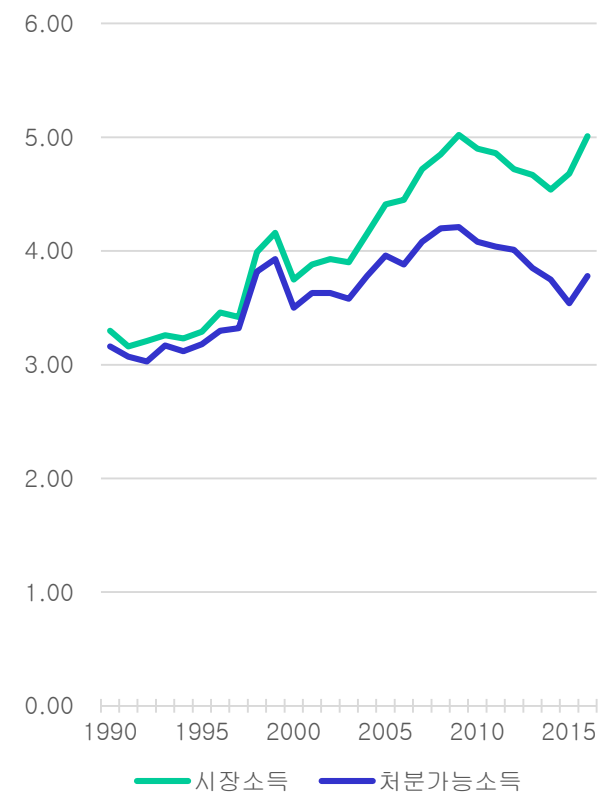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p90/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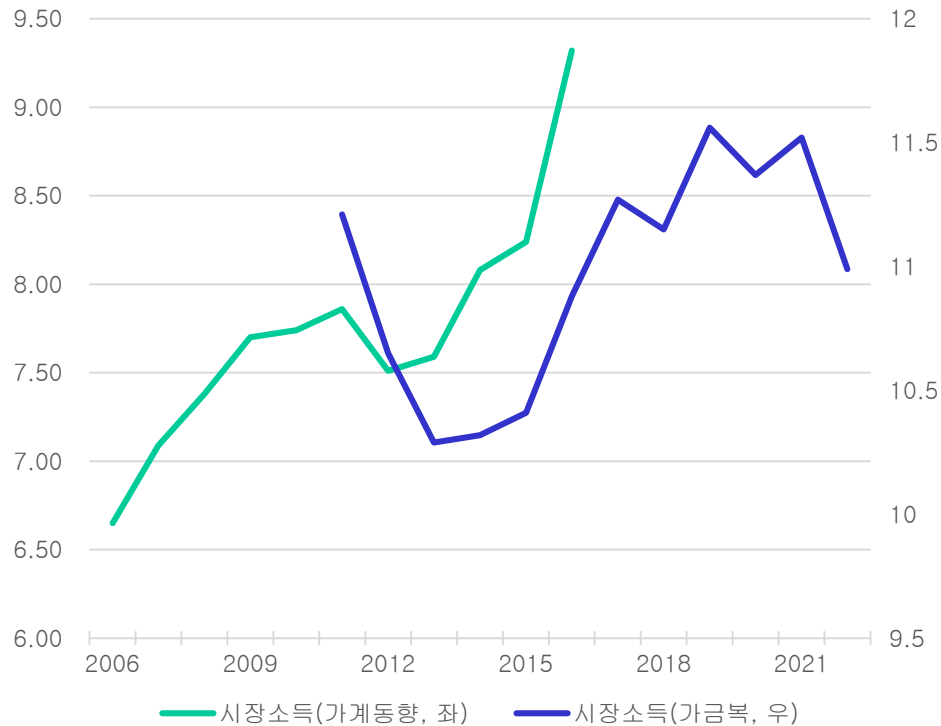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1990년대 초반 이후 소득 불평등 악화, 그러나 2010년대 초반에 완화
-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 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 격차가 벌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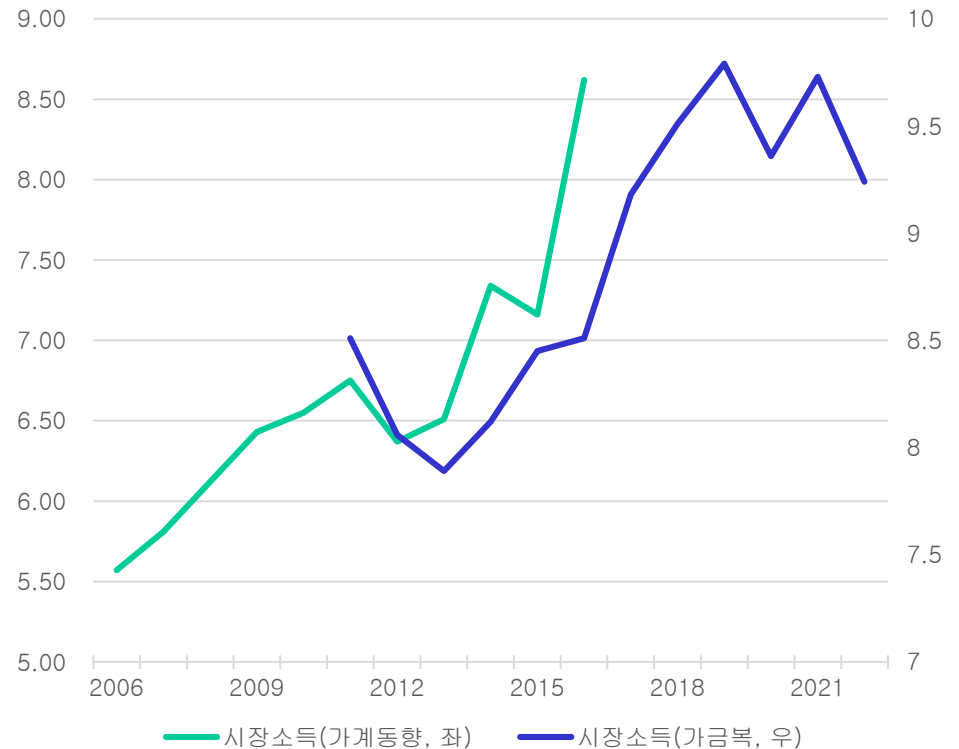
균등화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불평등과 양극화 간 간극

전체 가구 시장소득 기준: 2006-2022년(가계동향조사+가금복)

5분위 배율



p90/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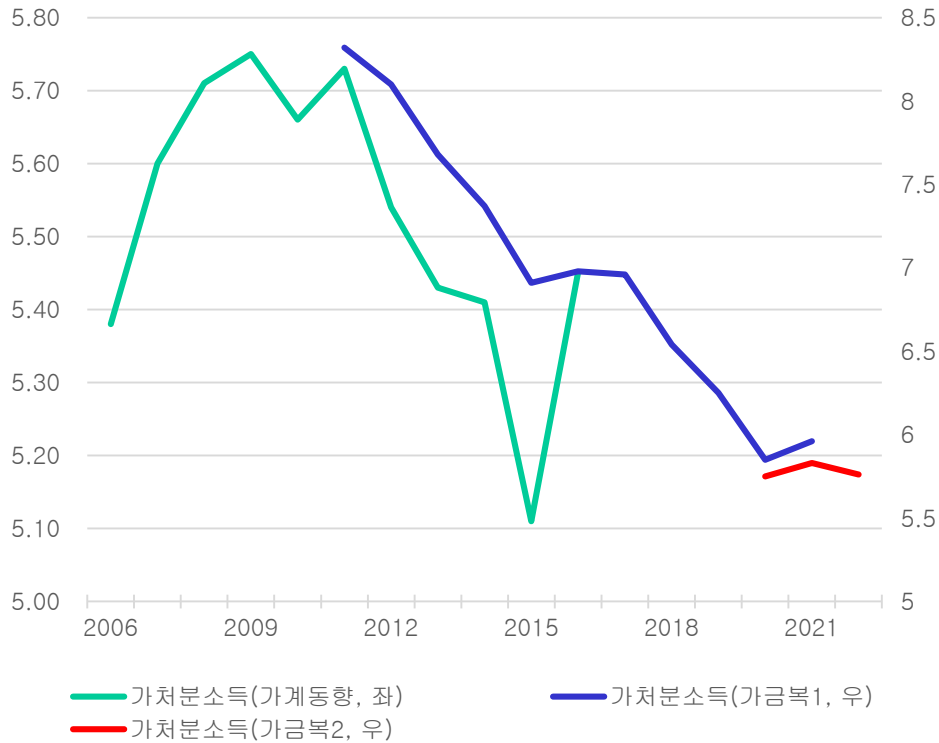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2012-3년 이후 5분위 배율과 P10/P10 배율 증가, 그러나 **코로나 시기 감소**
- 2010년대 초반 지니 계수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 완화, **이 추세와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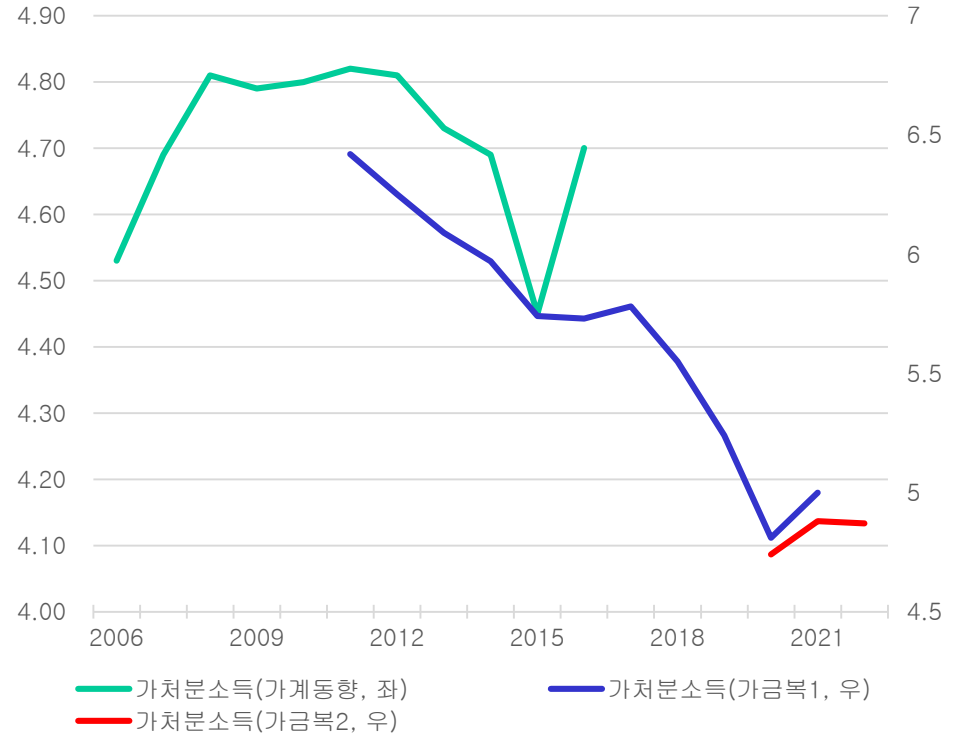
균등화 가구소득 불평등 추이: 불평등과 양극화 간 간극

전체 가구 가처분 소득 기준: 2006-2022년(가계동향조사+가금복)

5분위 배율



p90/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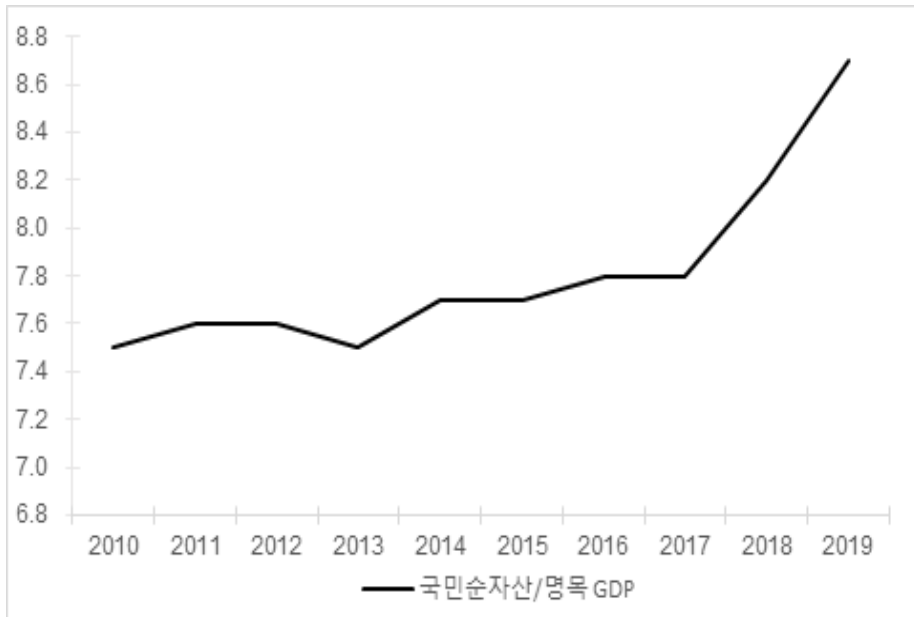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2010년대 초반 이후 5분위 배율과 P90/P10 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10년대 초반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 추이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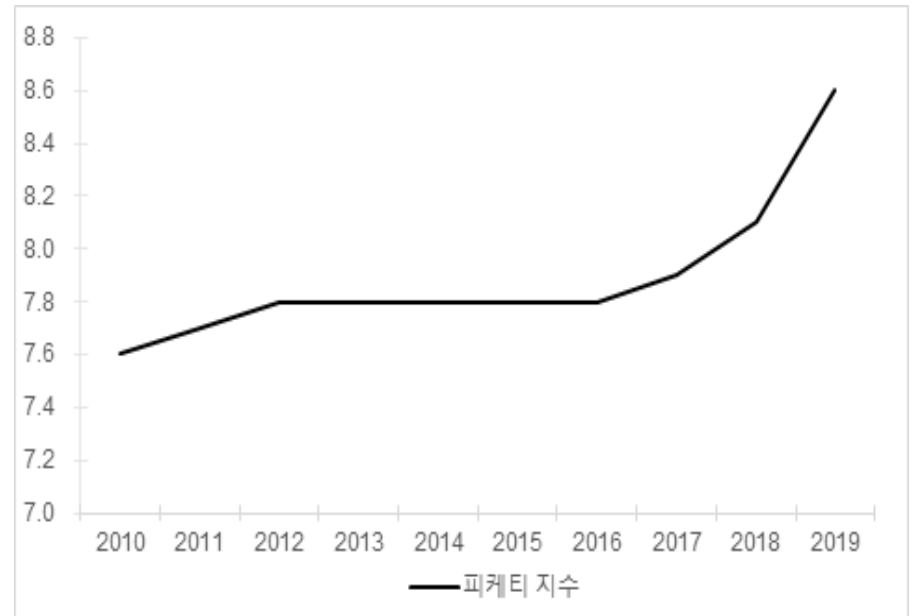
자산 불평등: 국민경제 수준

자본/소득(피케티 지수, β) 비율의 추이

국민 순자산/명목 GDP(배율)



피케티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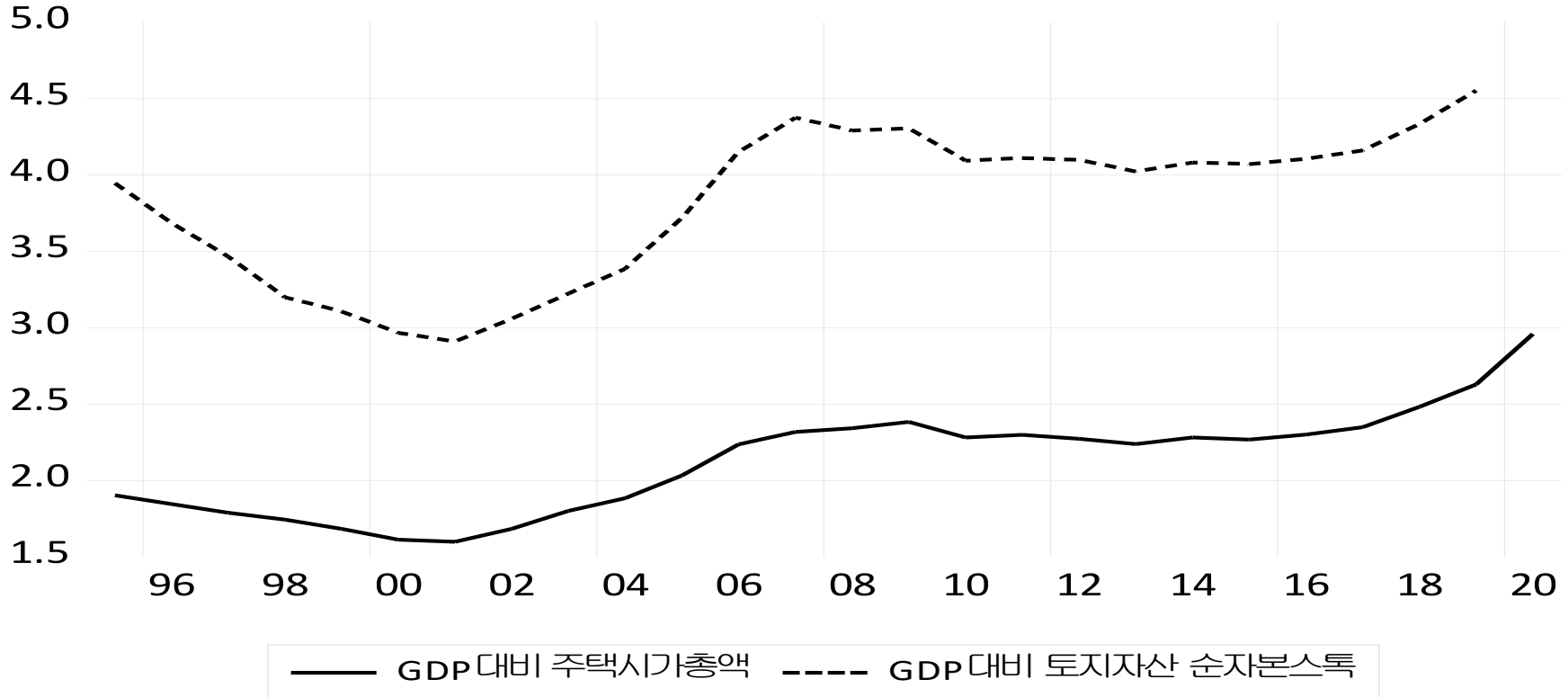


자료: 고용진 의원실(2020년 국감 보도자료).

-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국부 기준(2개년 평균 잔액)으로 소득 대비 자본의 값을 나타내는 피케티 지수(β)가 2000년 7.6에서 2019년 8.6으로 증가
 - 이 지수의 상승은 소득 도는 **자산 불평등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

자산 불평등: 국민경제 수준

GDP 대비 주택 시가 총액 및 토지자산 순자본스톡 배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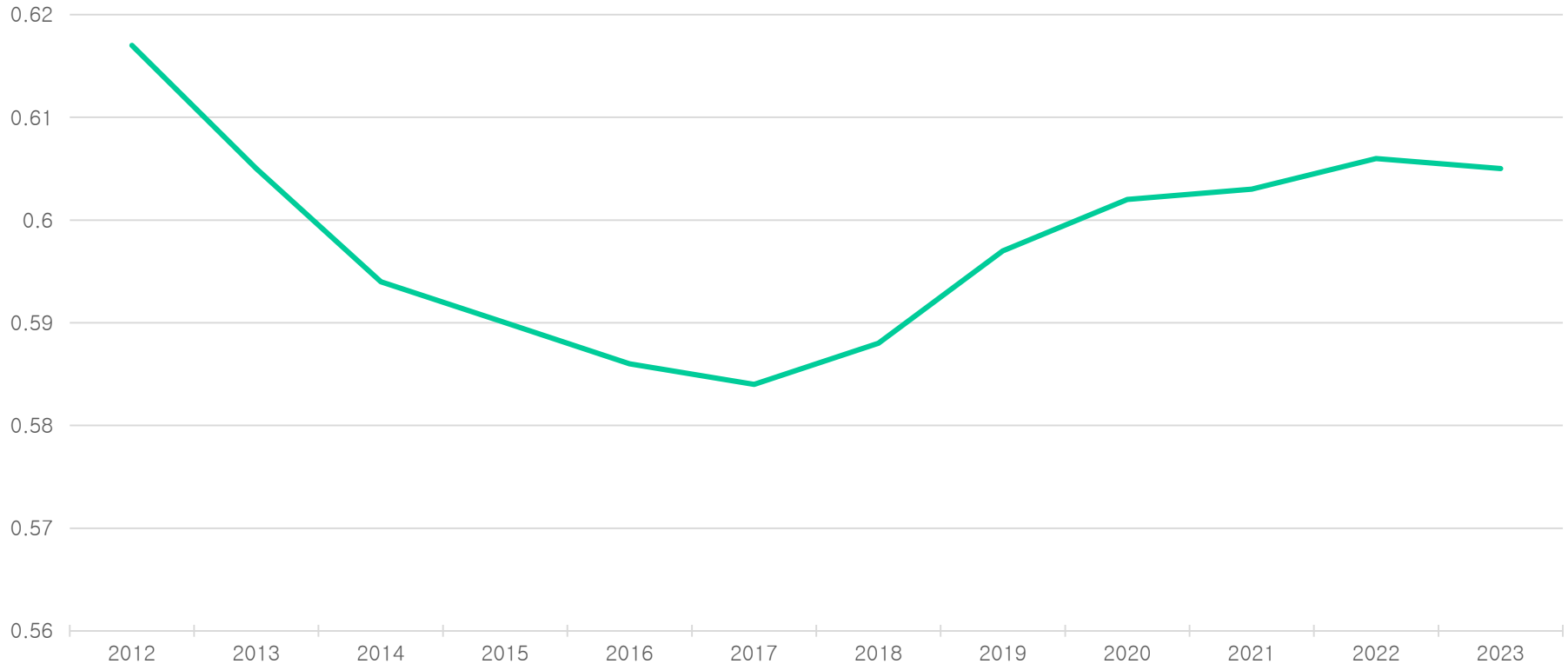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 1995-2019년 기간을 보면 토지자산보다 주택자산의 GDP 대비 배율이 더 높음.
- 이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인

가구 순자산 불평등 추이: 지니 계수

가구 순자산 기준: 2012-2023년(가금복)



주: 당해 연도 3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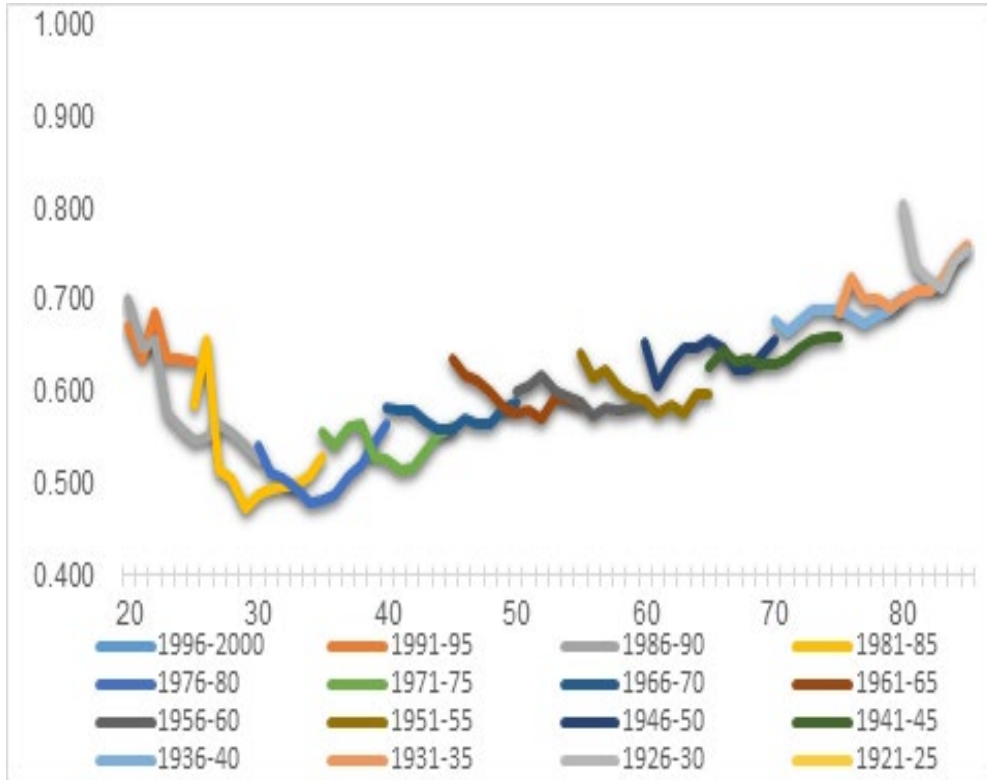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http://kosis.kr>).

-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구 순자산 지니 계수 상승
- 2023년 3월 기준으로 다소 하락, 전반적 주택가격 하락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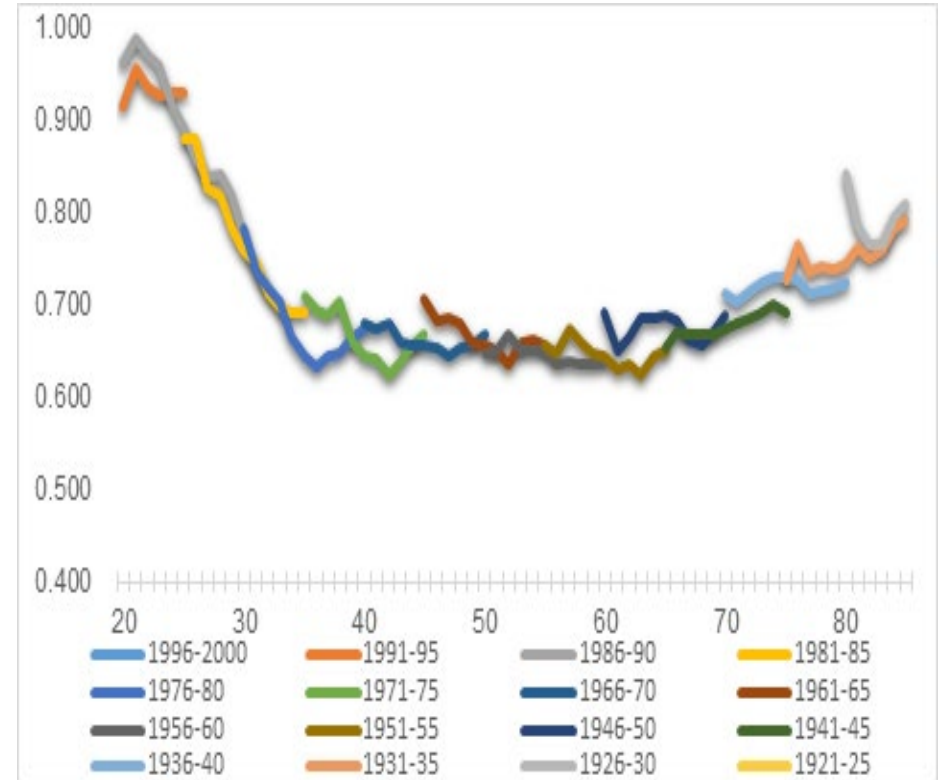
매우 심한 청년층 부동산 순자산의 불평등: 세대 간 양극화

순자산 불평등의 연령-자산 불평등(지니 계수) 프로파일

순자산



부동산 순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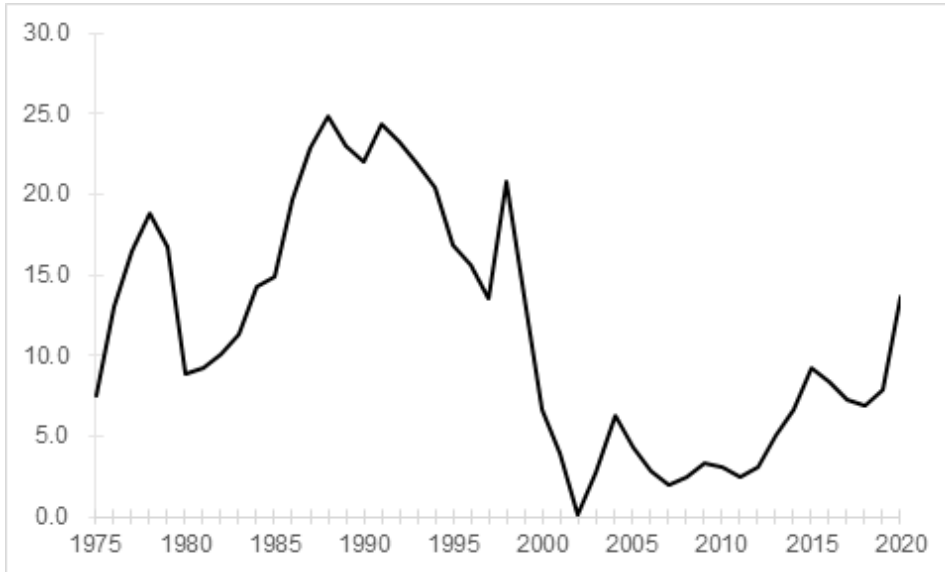


- 연령대별 순자산 지니계수 분포는 U자형 : 30대 초반에서 변곡점
- 연령대별 부동산 순자산 지니계수 분포는 20-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고(상속증여 효과 등), 40대 베이비 붐 세대 연령까지 횡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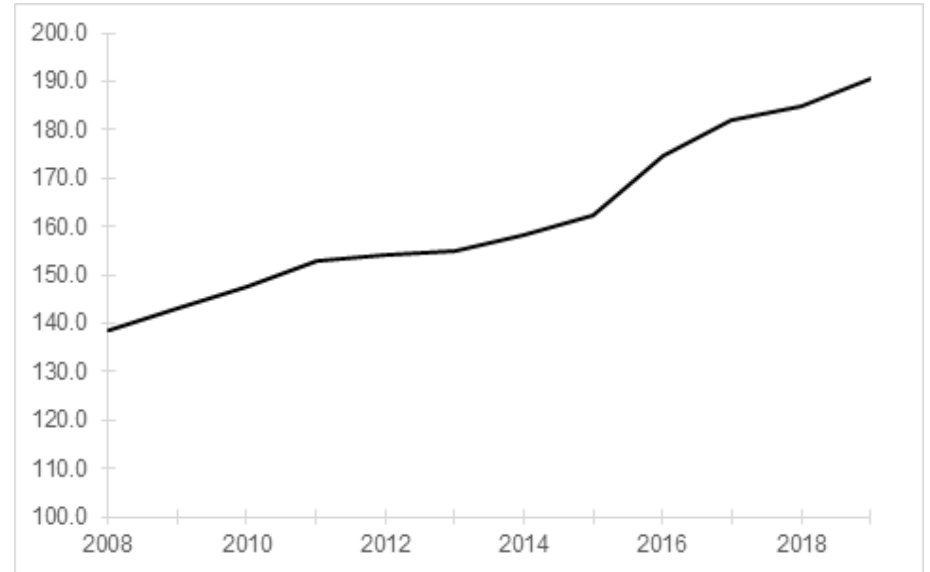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 투자와 가계 저축

가계의 저축률과 가계부채 비율 추이

가계 순저축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비율(%)



주: 1)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구부채총액/가구순처분가능소득)×100.
 2) 가계순저축률=[가계 순저축/(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OECD 통계.

- 가계저축률 증가가 거시·구조적 요인보다는 2010년대 초·중반 이후 시행된 **부동산 완화 대책** 등에 기인(김형석 외, 2018)
 - “가계 주택매매 수요 증가 → 주거용 건물투자 상승 → 가계 주택 매입 자금 수요 증가(가계부채 증가) → 가계소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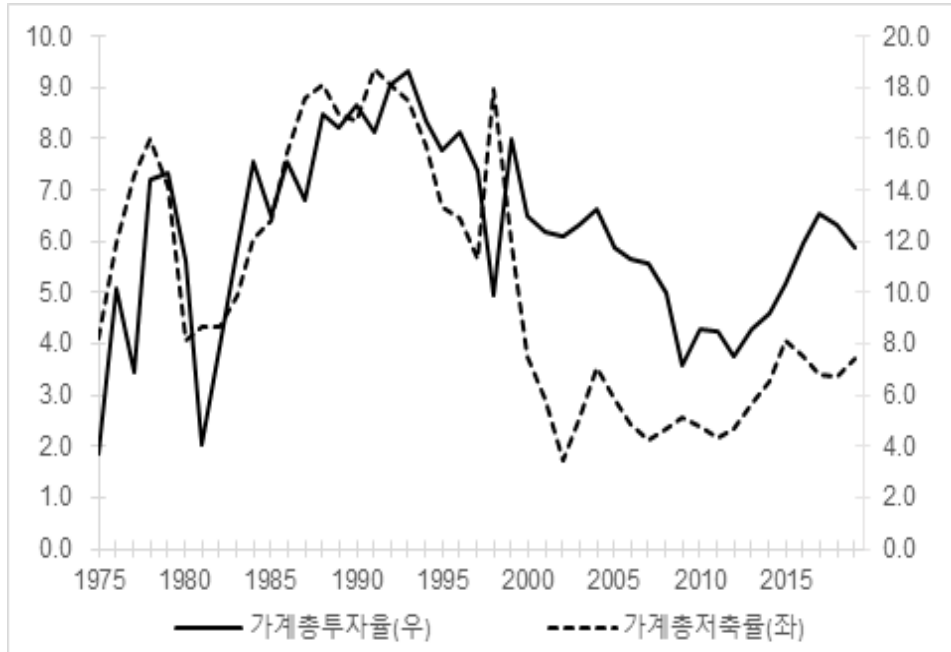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 투자와 가계 저축

- **가계 저축이** 주택 매입 수요에 중요한 재정적 수단 중의 하나
 - 2010년대 접어들어 가계저축률과 주거용 건물투자 증가율 간 상관성도 큼.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를 일컫는 **자산 또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는 **기대만큼 크지 않음**(김형석 외, 2018).
 - 소비성향이 높은 주택 보유 차입자의 가계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 증가**
 - 가계부채 축소가 아니라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가계 저축이 증가**
- 가계가 사실상 **공적 복지의 등가물로 부동산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반한 가계 투자의 경로의존성을 반영, 재테크를 통한 자산 증식이 노후보장 수단으로 널리 수용
 - 가계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광풍은 가용한 가계부채와 저축을 동원하여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가계의 소비 증가를 억제 → **소득주도성장 경로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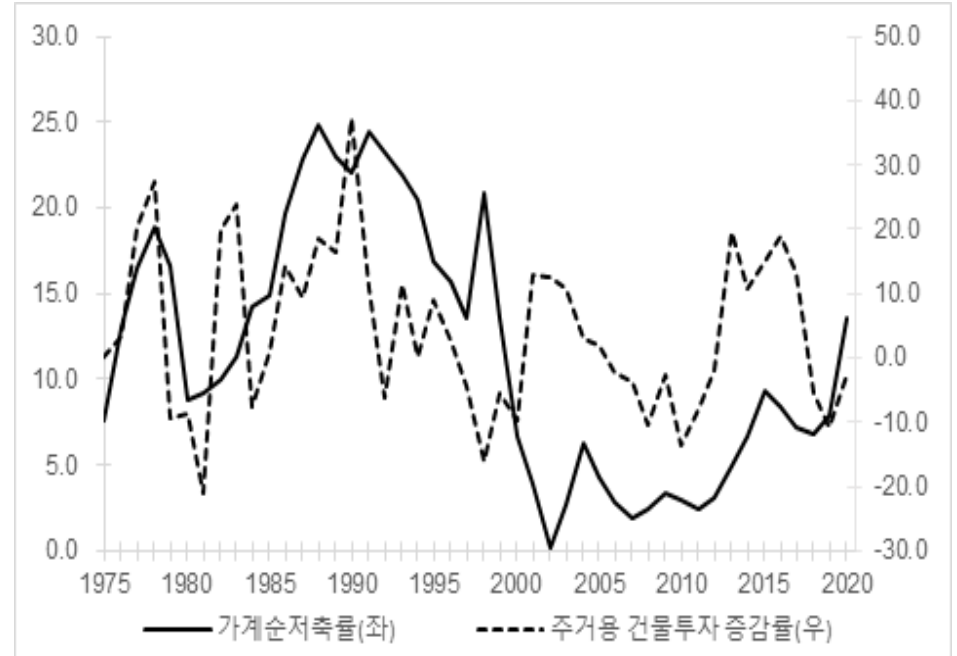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 투자와 가계 저축

가계의 저축률과 가계 부채 비율의 변동 추이

가계 총저축률과 총투자율(%)



가계 순저축률과 거주용 건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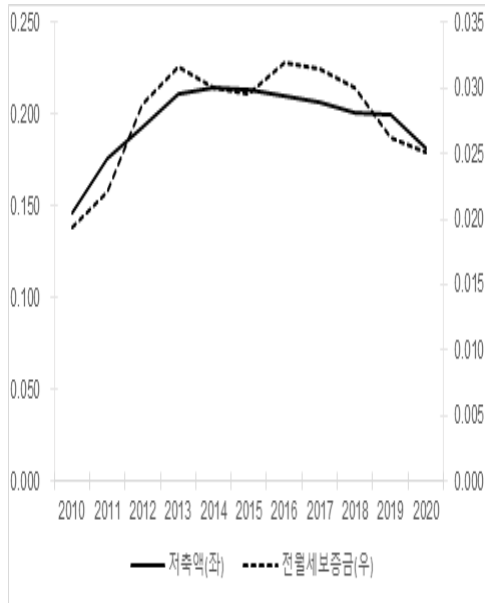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 저성장이 만연하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세계에서는 **생산적 투자가 거의 없는데**, Summers(2016)는 이를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라고 일컬음.
- Tirole(1985)은 이 경우 '**자산 거품**'이 합리적인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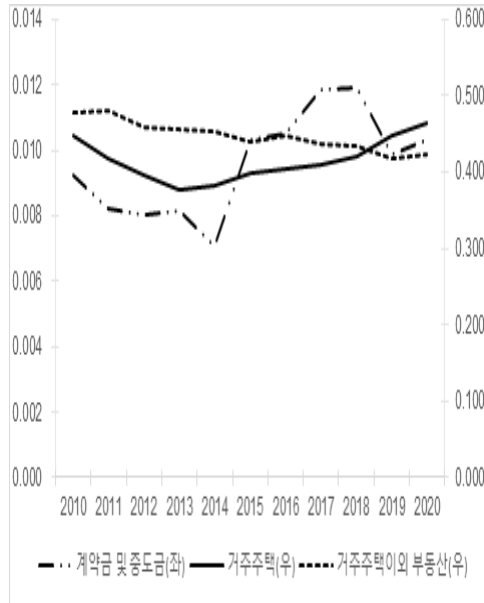
순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자산과 부채 항목별 순자산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100, %)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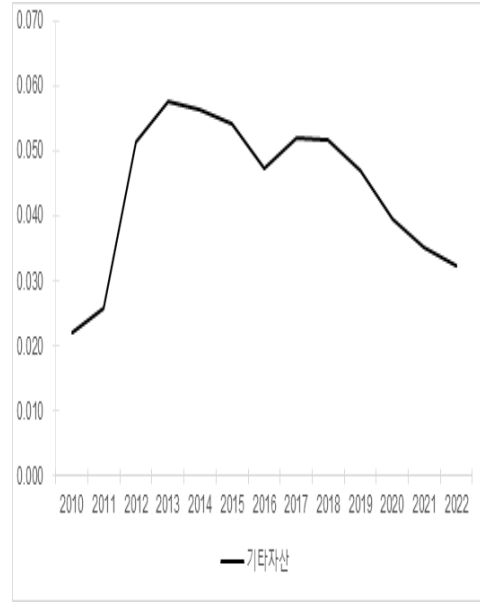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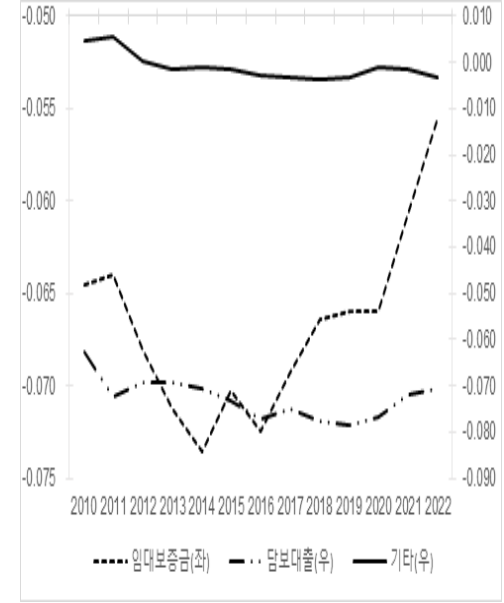
부동산 자산



기타 실물자산



부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 자료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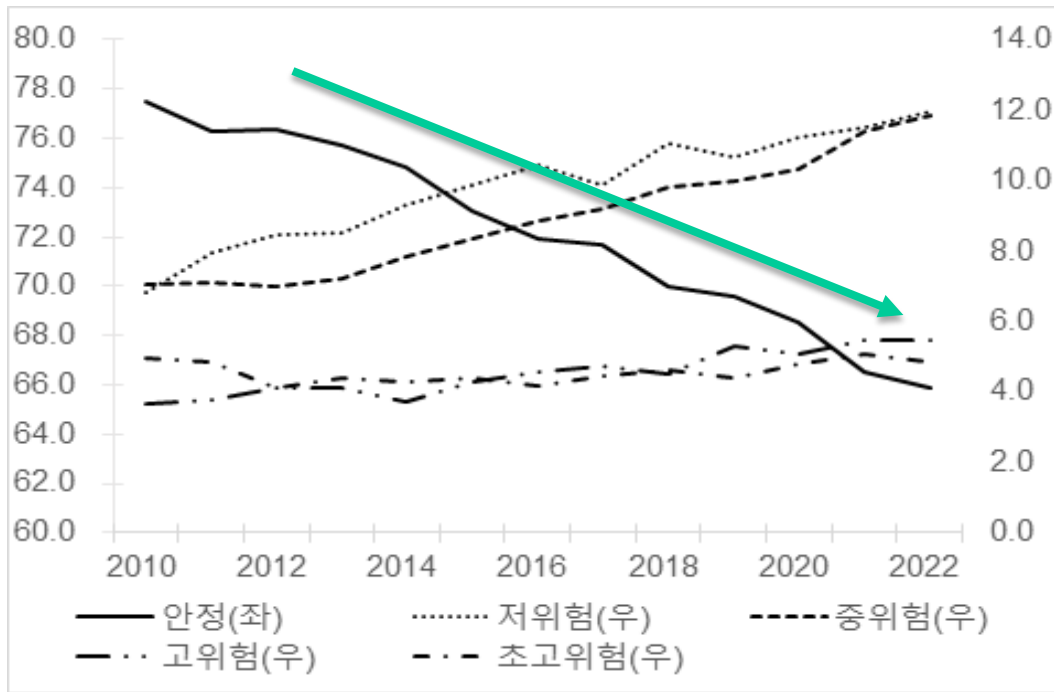
- 정의상 **부채 항목**인 담보대출과 기타는 순자산 불평등도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2019년 이후 상승세로 **순자산 불평등 악화** 기여
- 임대보증금도 2010년대 중반 이후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부동산 경기 붐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 금융 불안정성 증대

- LTI로 본 부채 보유 가구의 재무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
- DSR과 DTA의 결합 분포를 보면 전자로는 양호하지 않으나 후자로는 양호한 가구 비중이 높아 소득이나 금리 충격시 부채 상환 부담 가중 가능성

LTI로 본 위험 등급별 부채 가구 비중(%): 2000-2022년

DSR과 DTA 등급별 결합 분포(%):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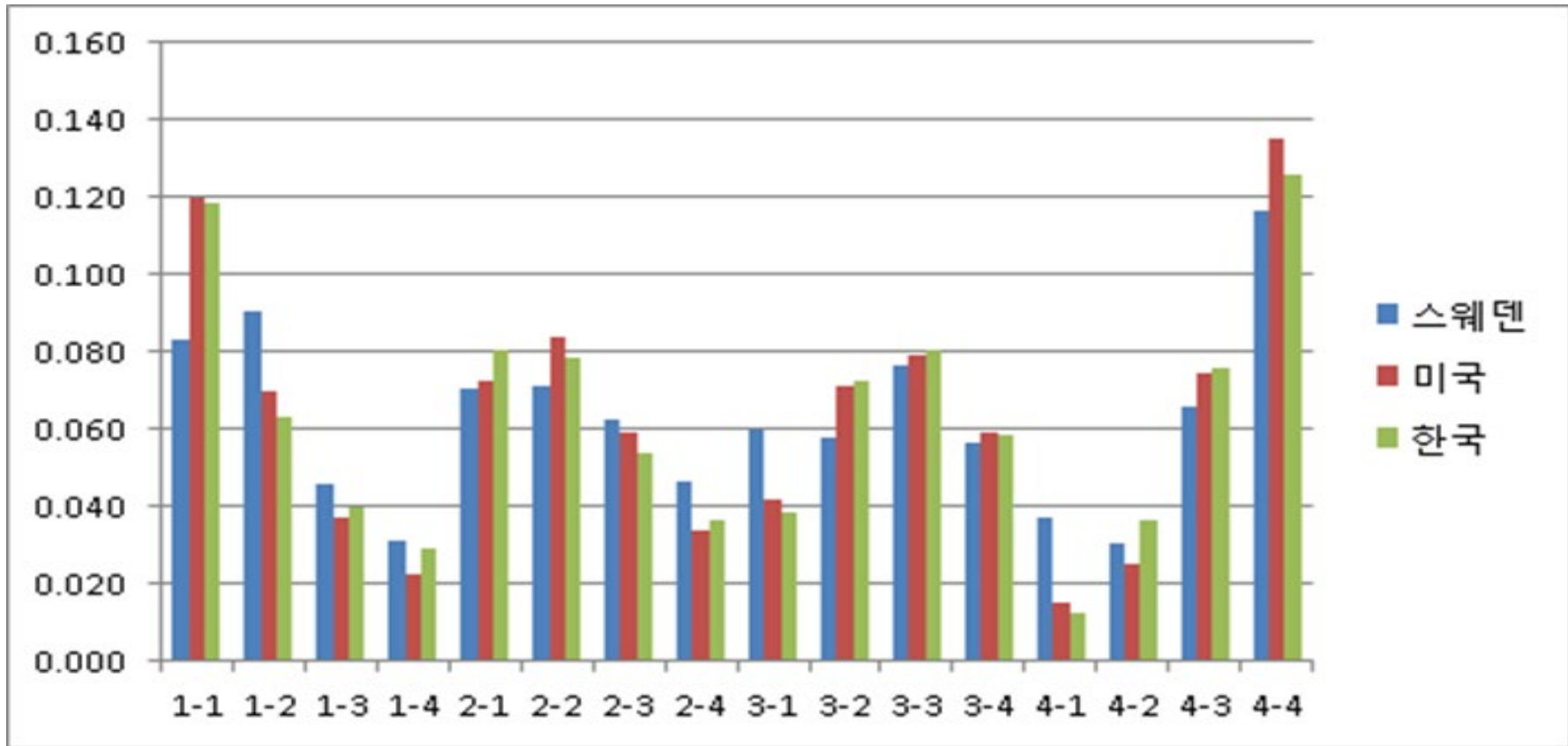
		DTA				
		안정적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D S R	2022년					
	안정적	89.0	4.0	2.0	2.0	3.0
	저위험	87.0	6.0	2.0	2.0	2.0
	중위험	84.0	8.0	3.0	3.0	3.0
	고위험	81.0	9.0	4.0	3.0	3.0
	초고위험	80.0	9.0	4.0	3.0	3.0

주: 1) LTI = 총부채/처분가능소득; DSR = 원리금 상환액/처분가능소득; DTA = 총부채/총자산

2) 중위험 이상이면 한국은행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판단

자료: 통계청에서 재구성.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의 국제 비교



자료: OECD, <http://dx.doi.org/10.1787/423815213564>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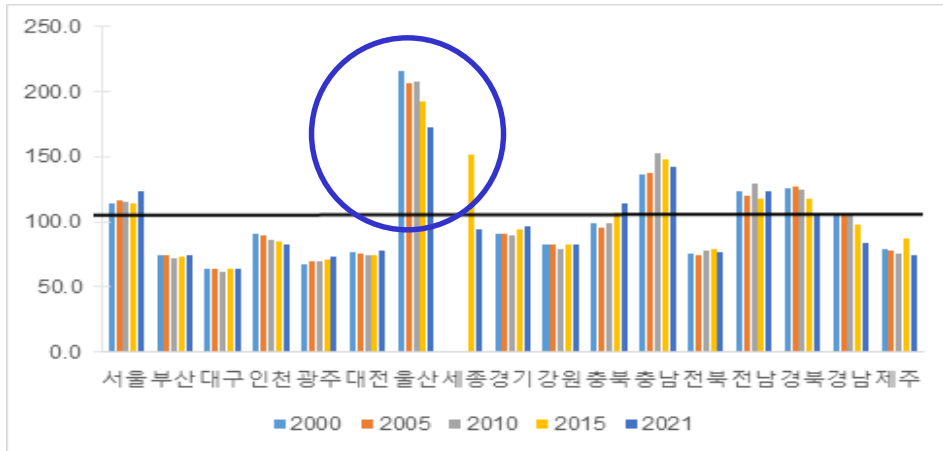
- 스웨덴은 1-1(저소득-저자산)과 4-4(고소득-고자산)의 비중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낮고, 1-4(저소득-고자산)나 4-1(고소득-저자산)의 비중이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높음.

지역 간 상대 소득 격차는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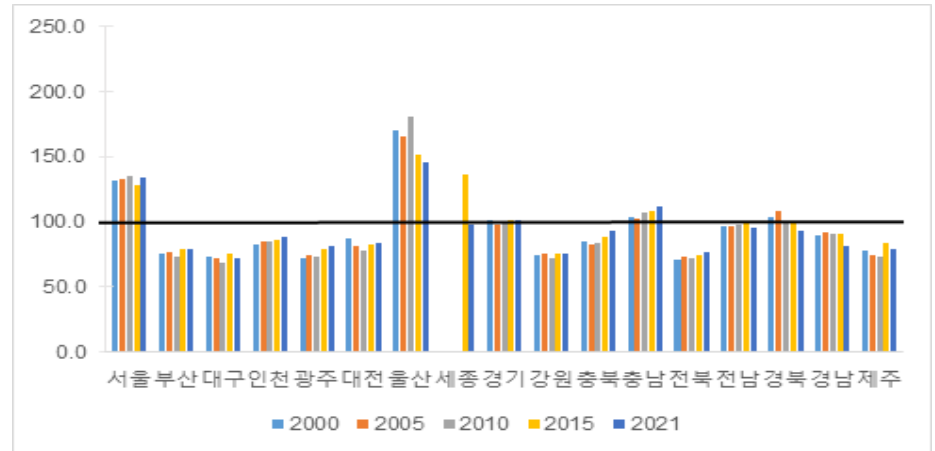
- 지역 간 상대 소득 격차는 사실상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로 요약: 울산 예외

17개 시도별 상대 1인당 지역 소득(전국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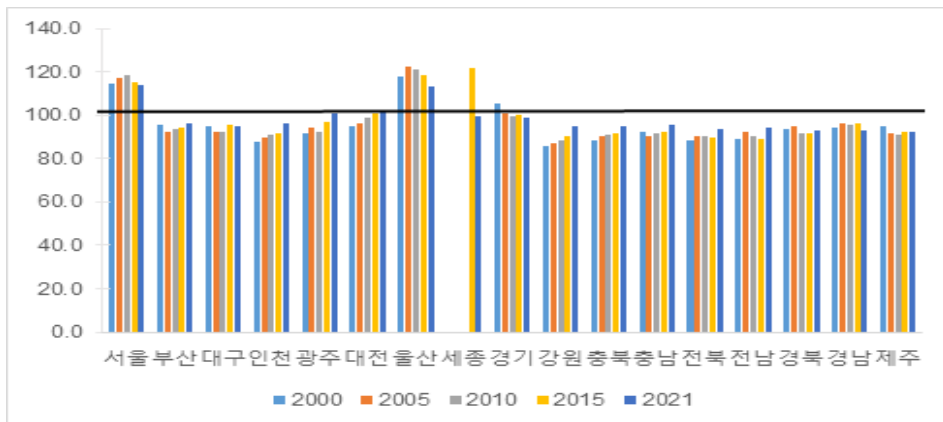
1인당 지역내총생산(생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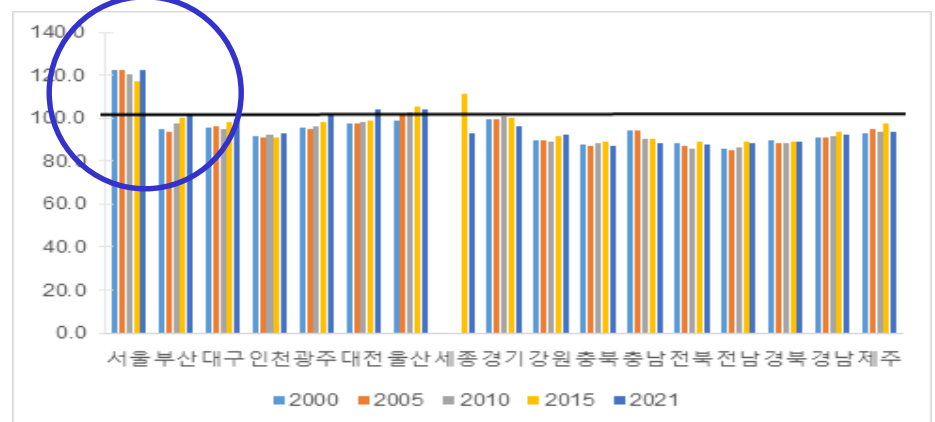
1인당 지역총소득(분배소득)



1인당 개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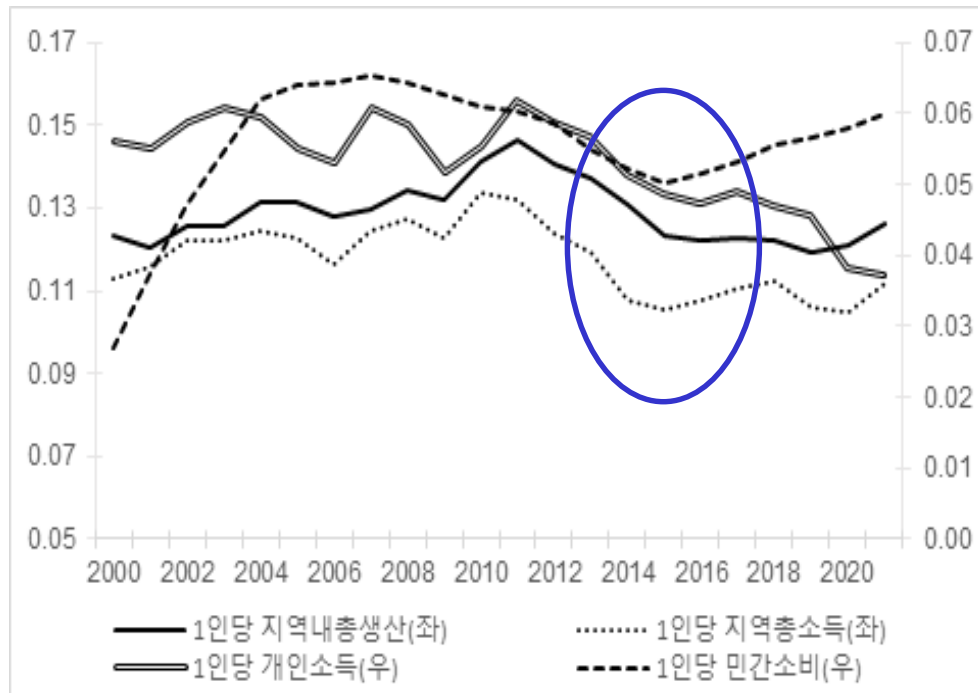
1인당 민간소비(지출소득)



1인당 지출 소득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격차 심화

- 지역 간 소득격차, 특히 **지출 소득(민간 소비)** 2010년대 중반 이후 격차 심화
- 가구 처분가능소득 불평등에서 **지역 요인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
- 지역 생산 소득의 인구 가중 지니계수 0.1, 가구 시장소득의 지니 계수 0.4라면 지역 간 평균소득 격차는 가구 시장 소득 격차의 **약 1/4 정도 설명**(Milanovic,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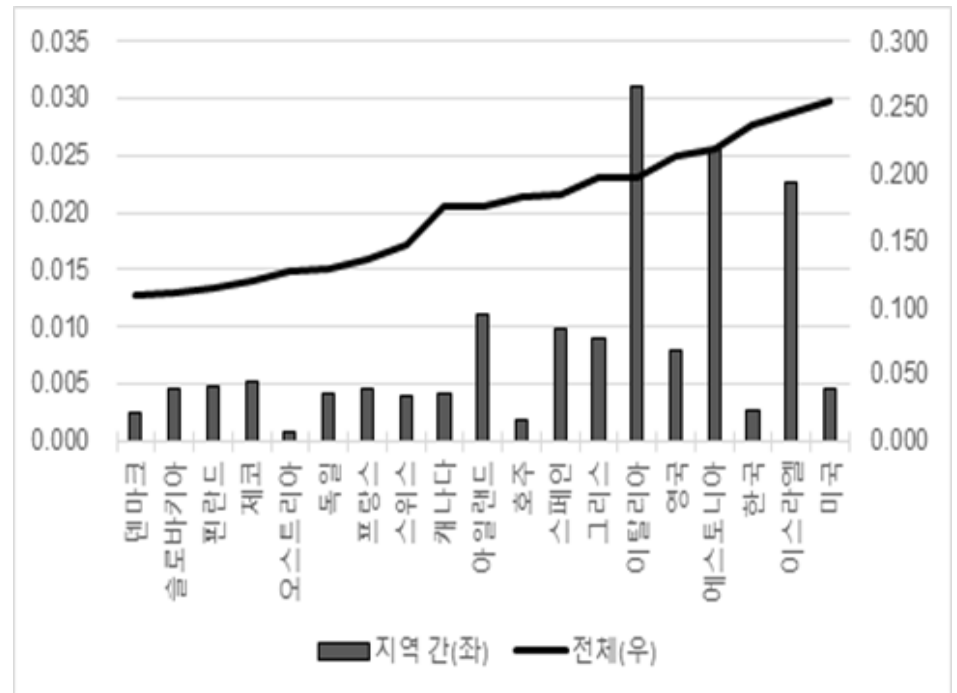
지역 간 소득 격차(인구 가중 지니 계수): 2000-2021년



주: 17개 시도 총계 소득은 명목 기준이고, 세종시는 2013년 이후 분석에 들어갔으며, 2021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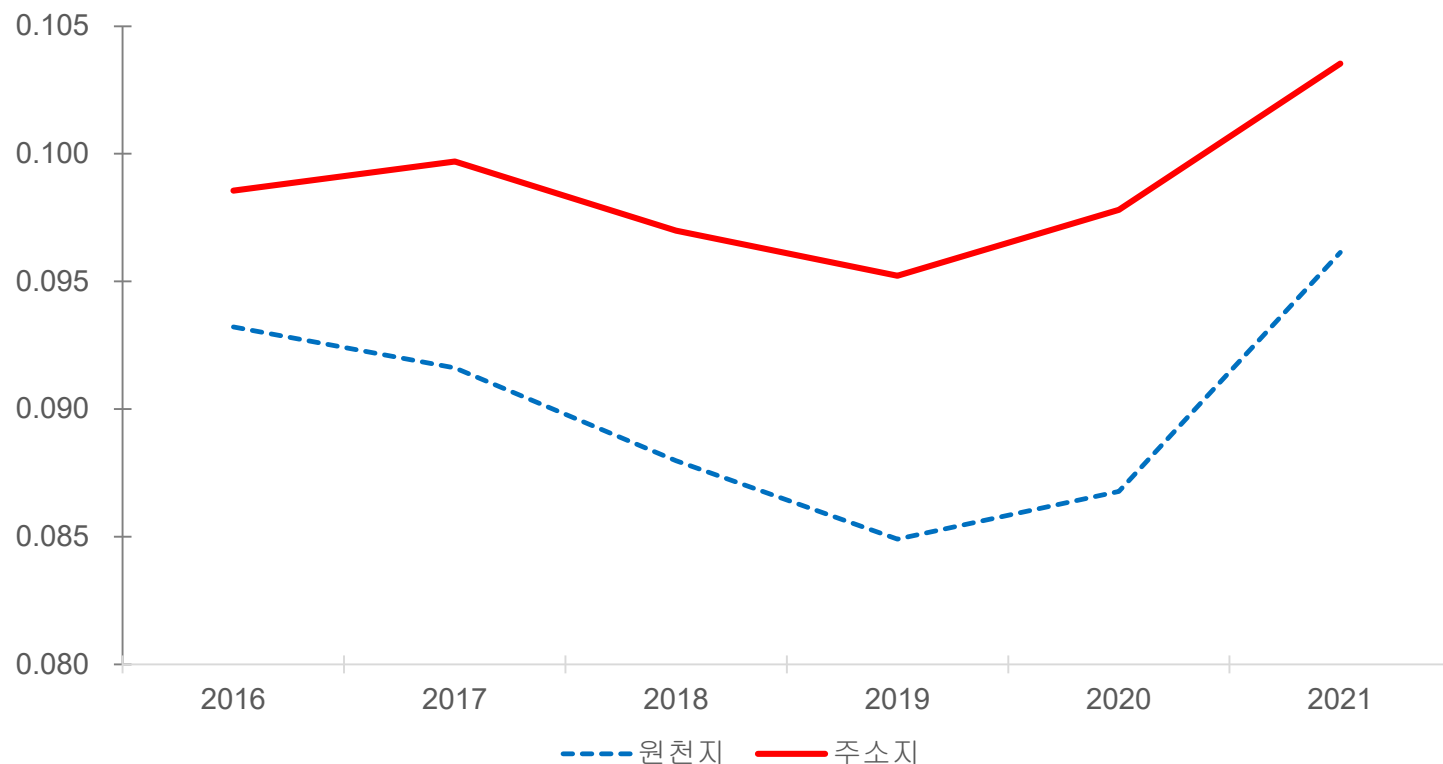


자료, 정준호(2021).

2019년 이후 시군구 간 근로소득 격차 증가

- 원천지와 주소지 기준 모두에서 2019년 이후 시군구 간 평균 근로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지역 근로소득(총급여)의 인구 가중 지니계수: 2016-2021년



시군구 근로소득(총급여)의 지리적 분포

- 주소지 기준으로는 서울 대도시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이 높고(예: 서울 강남), 반면 원천 징수지 기준으로 보면 산업 중심지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이 높음(예: 경기 수원, 울산 북구 등)

원천지 기준 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5개, 2021년 기준

	총급여_원천지	총급여_주소지
경기 수원시	63.7	45.8
인천 남동구	60.1	31.7
경기 이천시	58.6	42.3
울산 북구	56.4	47.1
서울 종로구	56.4	52.1
서울 영등포구	56.1	47.3
서울 중구	54.6	49.4
전남 나주시	50.0	36.3
경기 성남시	48.6	54.1
서울 강남구	47.8	80.8
서울 서초구	47.7	80.3
울산 동구	47.1	41.4
충남 서산시	46.8	43.7
서울 용산구	46.8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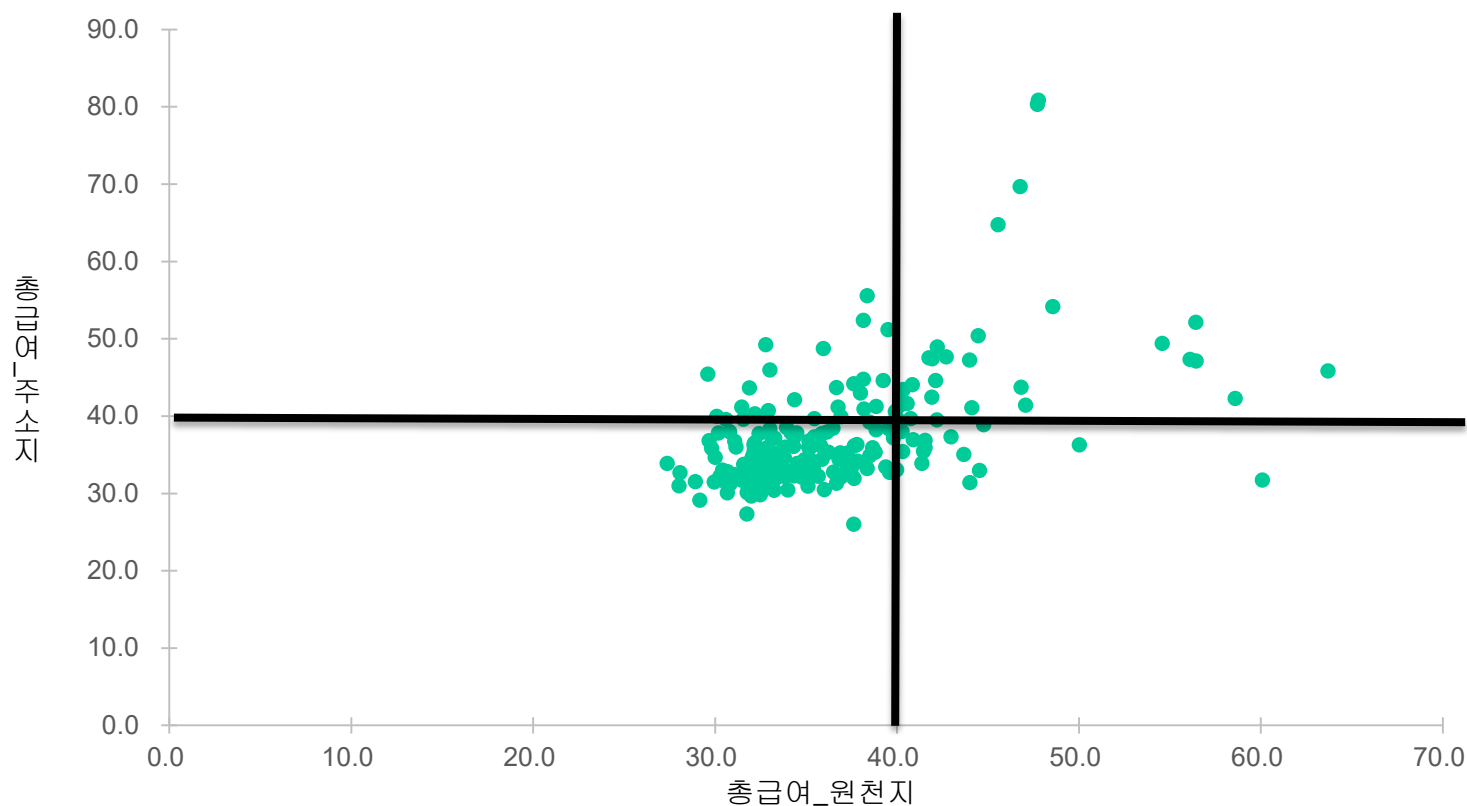
주소지 기준 지역별 근로소득: 상위 15개, 2021년 기준

	총급여_주소지	총급여_원천지
서울 강남구	80.8	47.8
서울 서초구	80.3	47.7
서울 용산구	69.7	46.8
경기 과천시	64.7	45.6
서울 송파구	55.5	38.3
경기 성남시	54.1	48.6
서울 성동구	52.4	38.2
서울 종로구	52.1	56.4
서울 마포구	51.2	39.5
경기 용인시	50.4	44.5
서울 중구	49.4	54.6
서울 양천구	49.2	32.8
경기 화성시	48.9	42.2
대구 수성구	48.7	35.9

시군구 근로소득(총급여)의 지리적 분포

- 지역 간 직주 분리 현상: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의 경우 주소지(80.3백만원)와 원천지(47.7백만원) 간 근로소득 격차 심함.

시군구 원천지와 주소지별 근로소득(총급여) 분포: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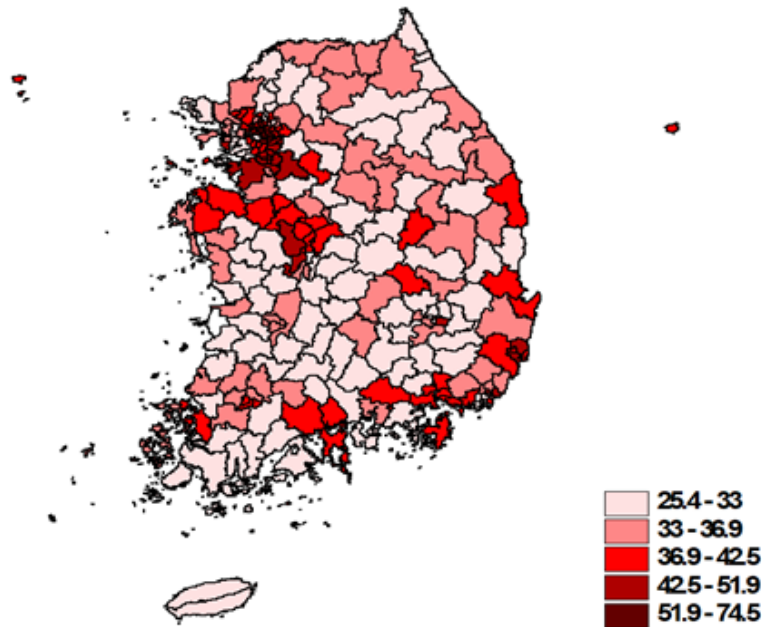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가격이 높은 지역은 거의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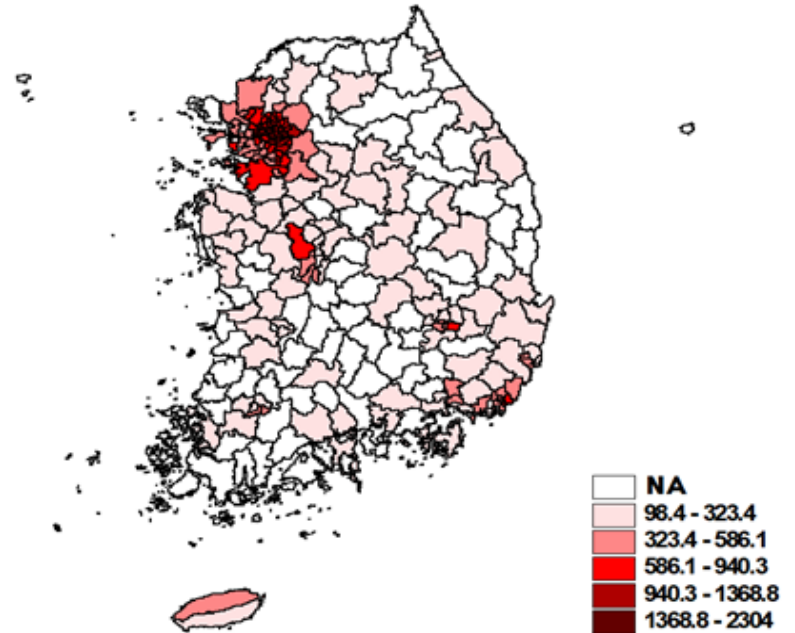
- 시군구 근로소득과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의 **최상위 5개 구는 상호 중첩**: 이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경기 과천시, 서울 송파구 순임.
- 아파트매매가격: 최솟값 대비 최댓값 배율은 23.4배; 근로소득: 최솟값 대비 최댓값 배율은 2.9배

근로소득과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의 공간 분포: 2021년 기준

주소지 기준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백만원)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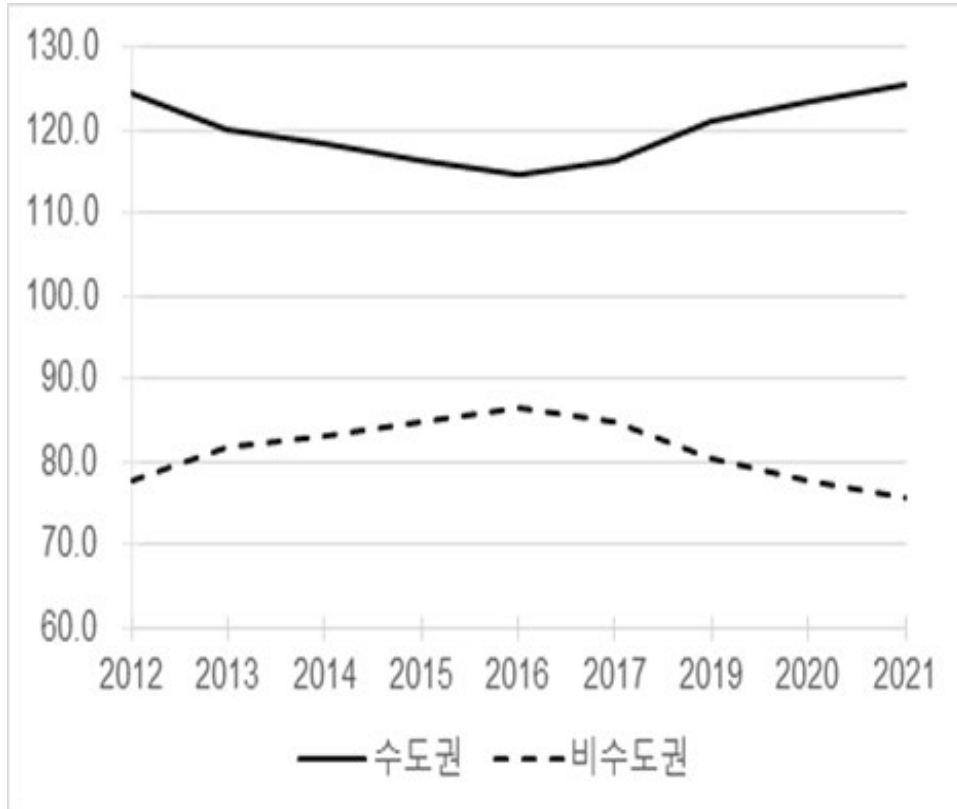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간 가구 자산 격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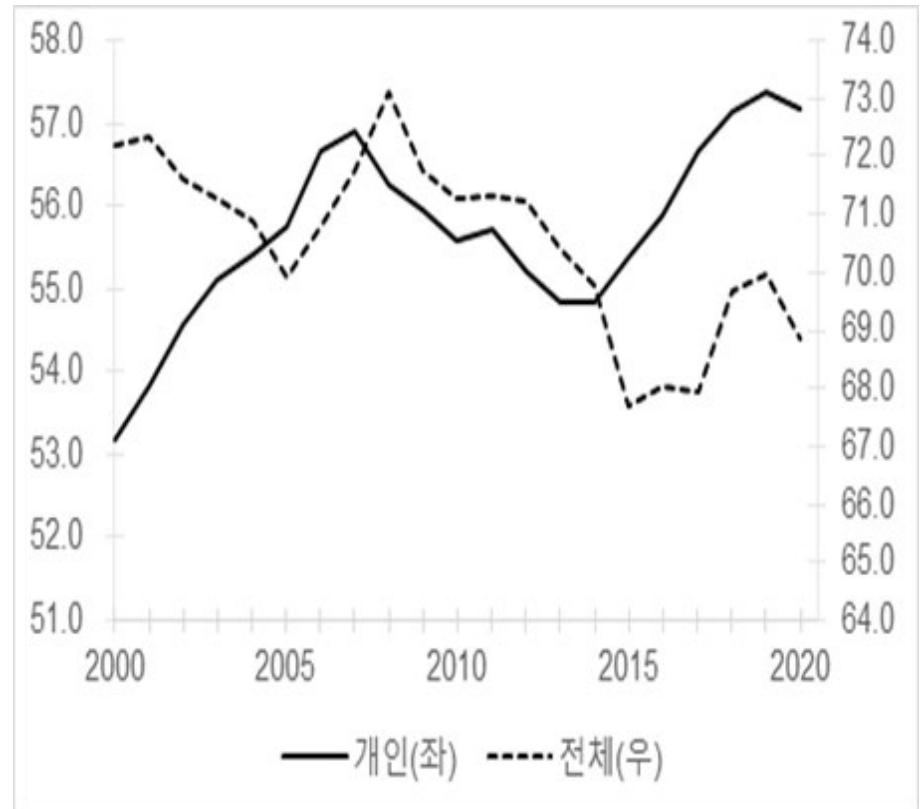
- 지역 간 개인 근로소득 격차보다 더 큰 지역 간 가구 자산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

가구의 상대 순자산 추이(전국=100.0)



재산소득의 수도권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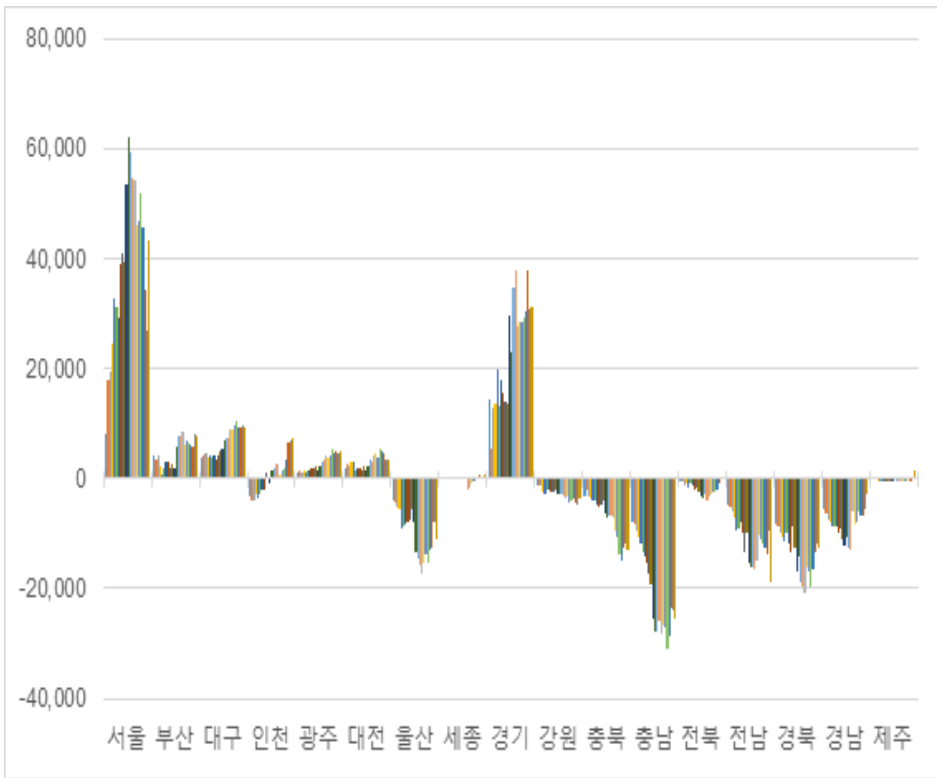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지역소득 자료에서 재구성.

한국의 공간 경제 구조는 분공장 경제

- 한국 지역경제는 **구상과 실행**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분공장 경제**
- 대기업 주도 수출 주도 경제 → 지역경제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과 긴밀히 연관

역외소득 순유출입 규모(십억원): 2000~2021년



주: 수도권 역외소득 유출입 비중 시차가 1년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OECD 자료에서 재구성.

수도권 역외소득 순유출입 비중(%): (시차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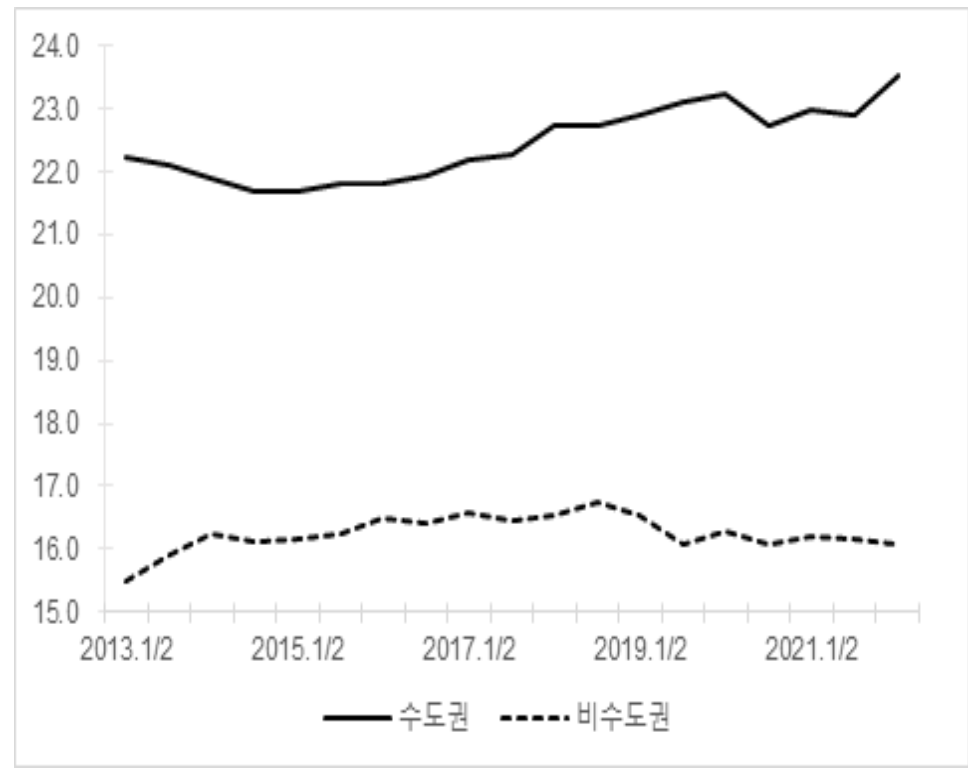
자료 : OECD, 통계청 지역 계정 자료에서 재구성

관청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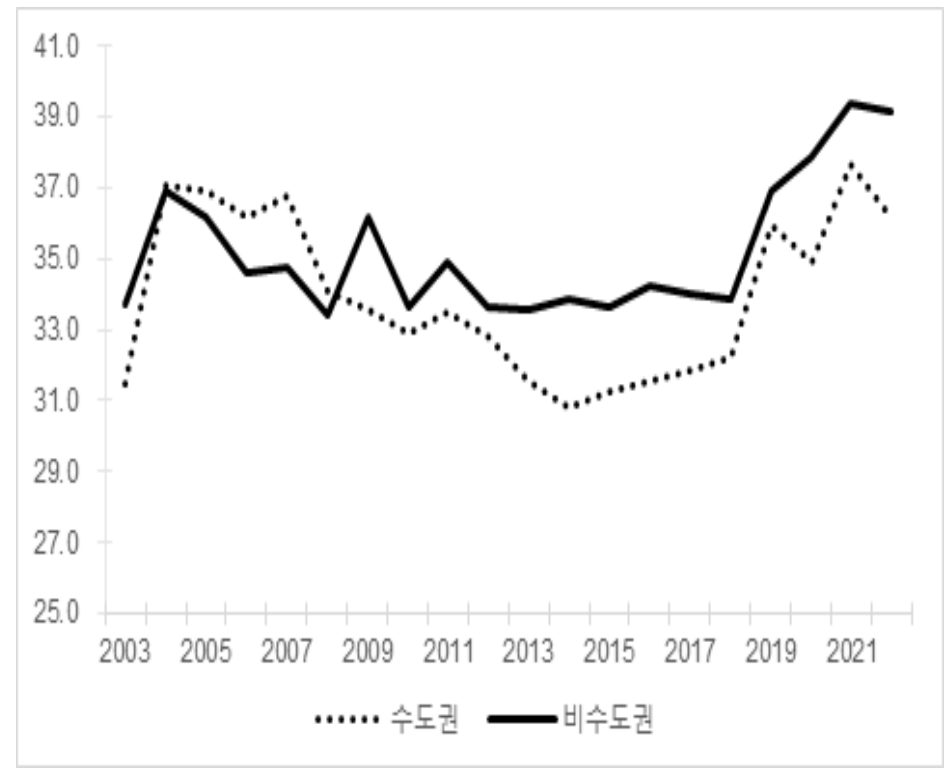
- 관청은 일자리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매우 심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청은 일자리의 비중 비교

지역별 관리·전문·사무직의 점유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역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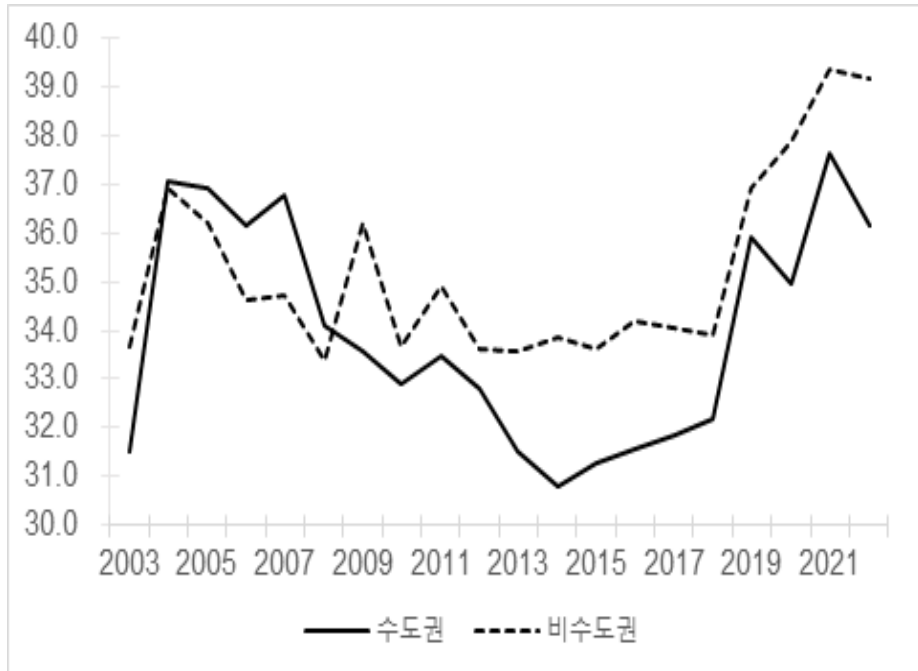
주: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중은 각 연도 8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경제활동조사 자료에서 재구성.

비수도권 내 팬참은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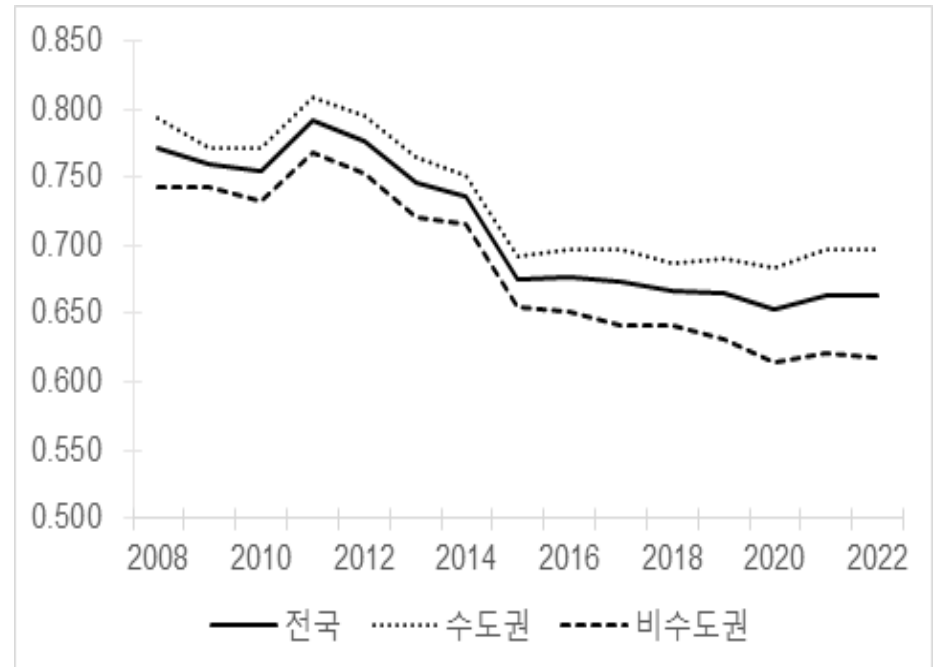
- 201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 상승세이지만, **비수도권** 비중 상대적으로 더 큼.
- 수도권의 4년제 대졸자 증가 대비 걱정 일자리 증가가 더 커서 **양질의 일자리**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더 많이 창출

지역별 팬참은 일자리의 추이

비정규직 비중(%)



4년제 대졸자 대비 걱정 일자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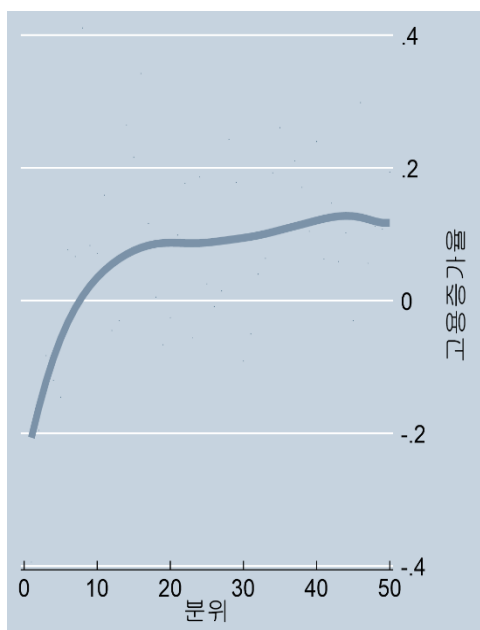


2010년대 후반 이후 비수도권 노동시장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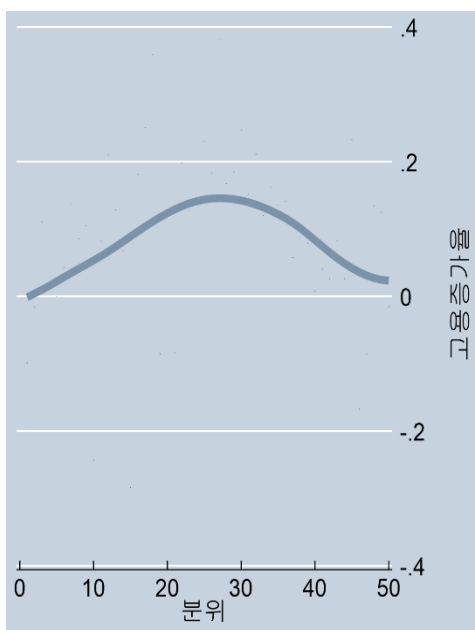
- 산업과 직업으로 구성되는 쌍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서열화하는 일자리 접근법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중국 효과**가 나타난 이전 시기와 달리 **2010년대 중반 이후 전형적인 양극화 패턴**이 나타남.

일자리 50 분위별 고용 증가율로 본 지역별 일자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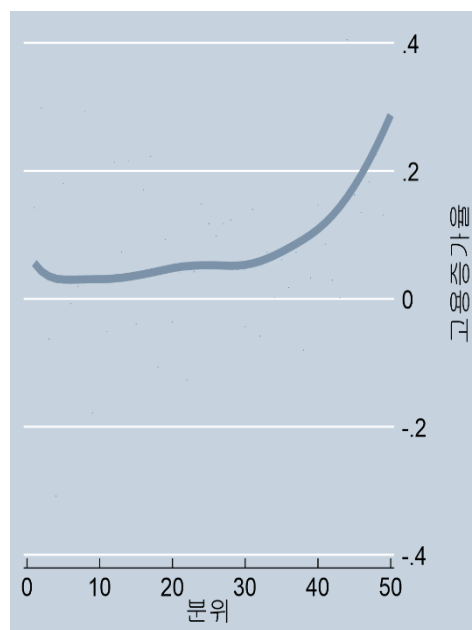
수도권(200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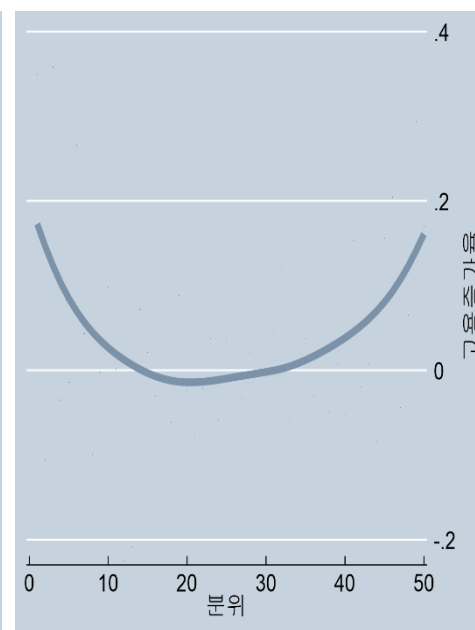
비수도권(2008~2012년)



수도권(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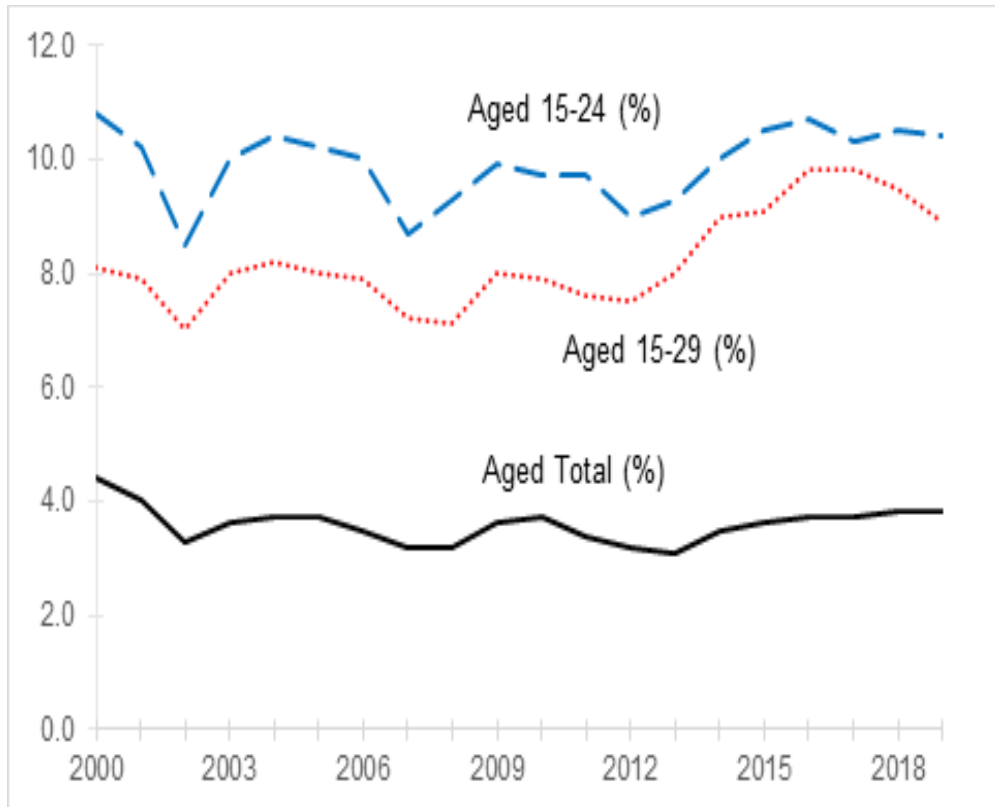
비수도권(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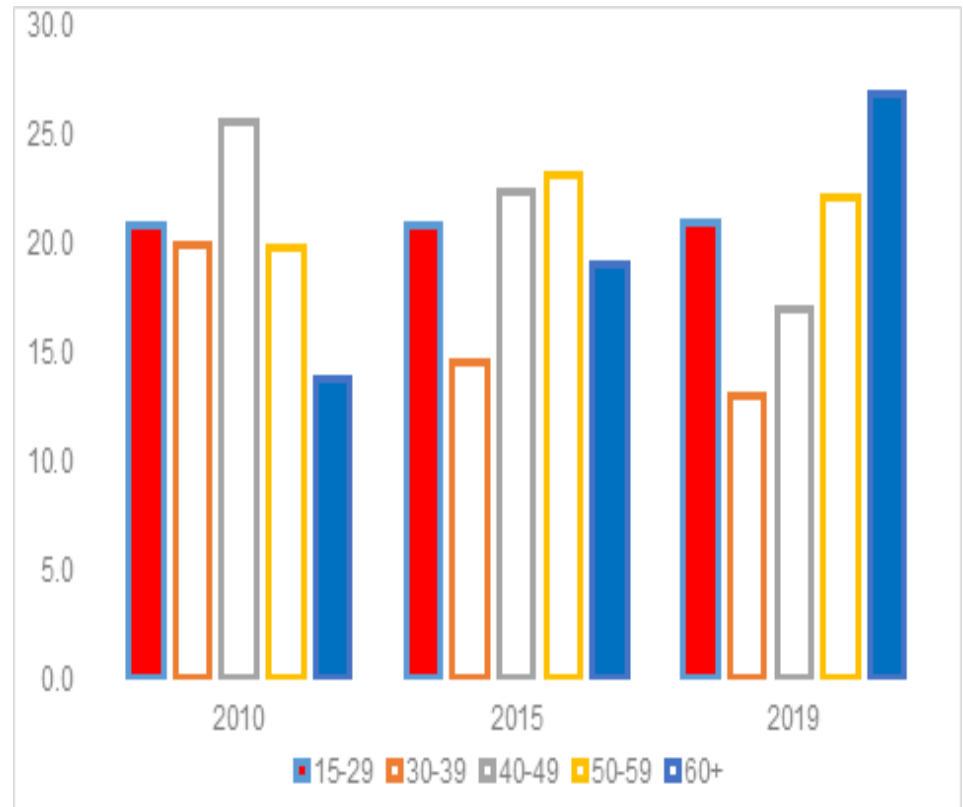
2010년대 이후 청년층 실업률 급등, 고령층 비정규직 증가

- 2010년대 이후 청년층 실업률 급등, 정책 개입 등으로 다소 완화, 그러나 매우 높은 수준. 반면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 증가

연령대별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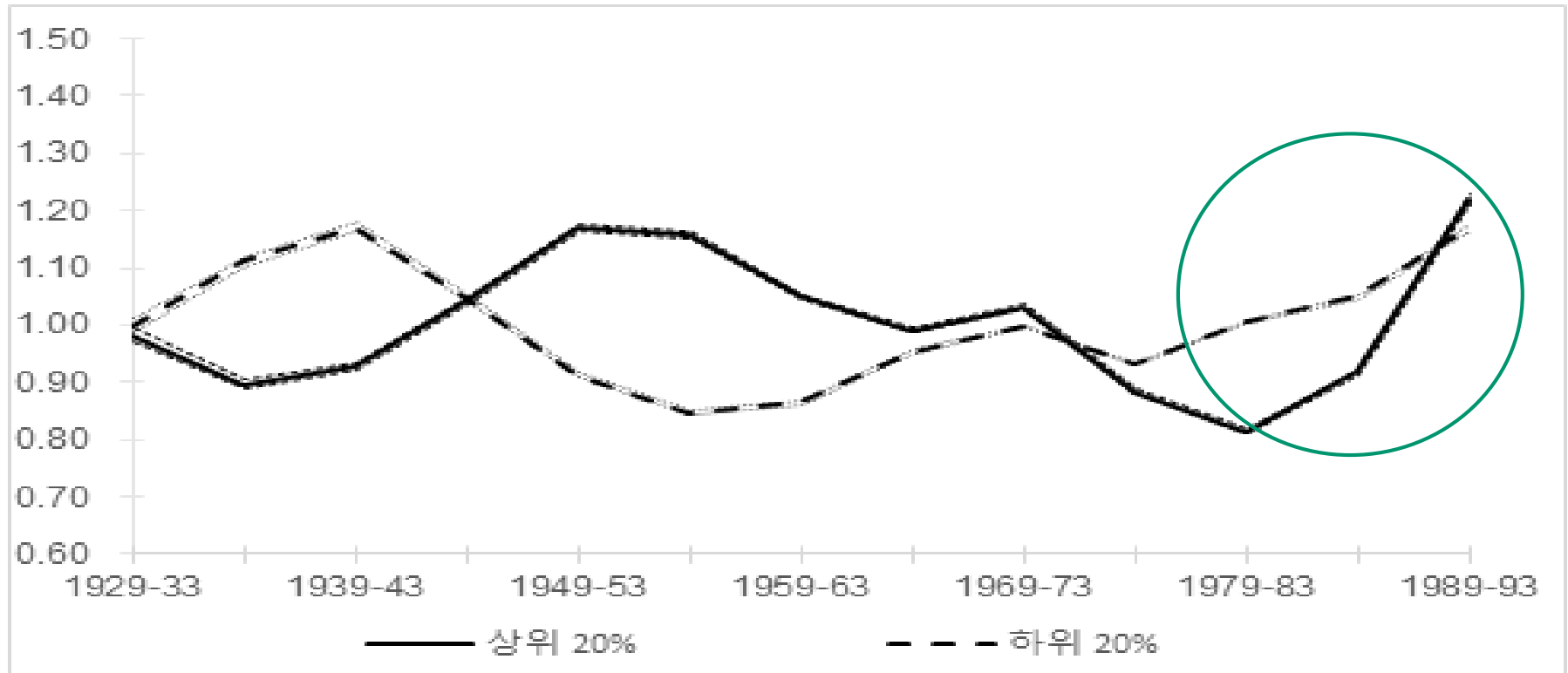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임금 기회의 세대 내 격차 심화

- 1960년대생 베이비 부머 세대 내 격차 완화, 1980년대생 이후 세대 내 격차 심화

임금 기회의 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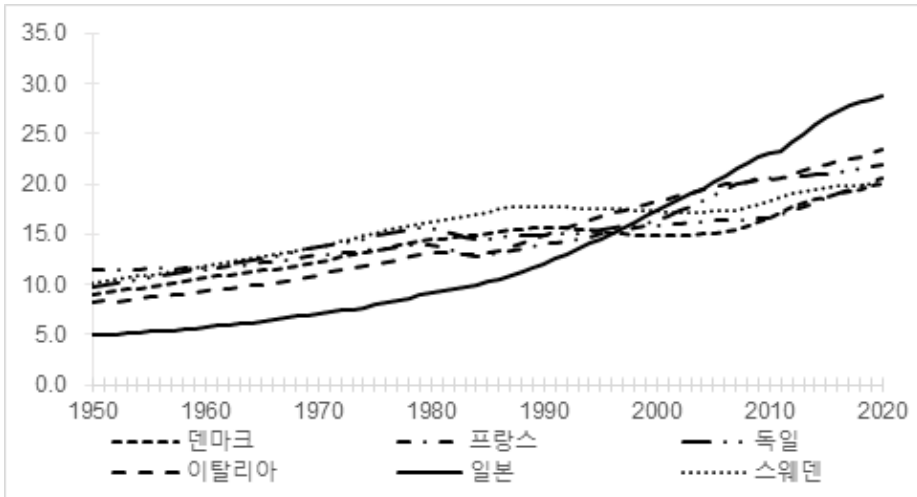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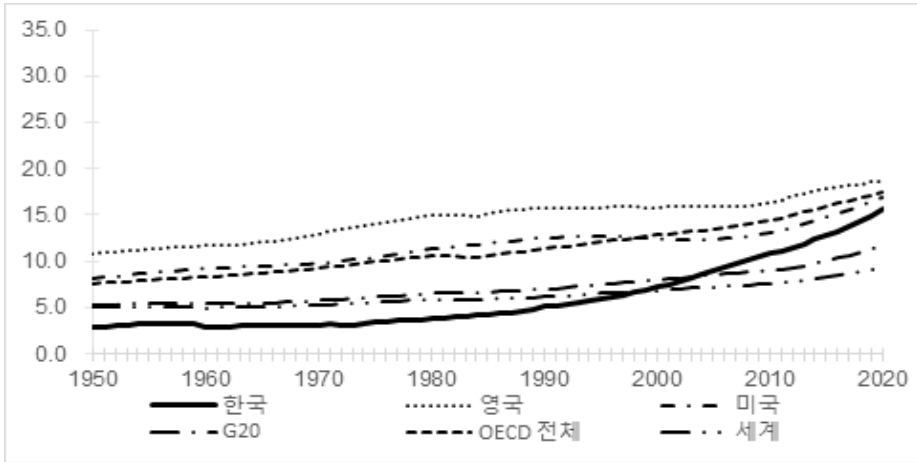
Note: Estimated using an APCD (Age-Period-Cohort Detrended) model with control variables including age, cohort, period, level of education, and job experience.

Source: Jeong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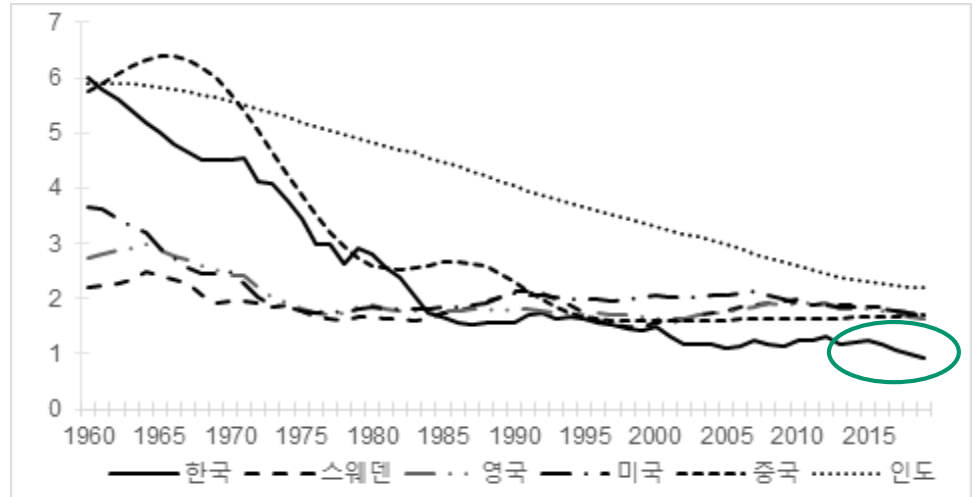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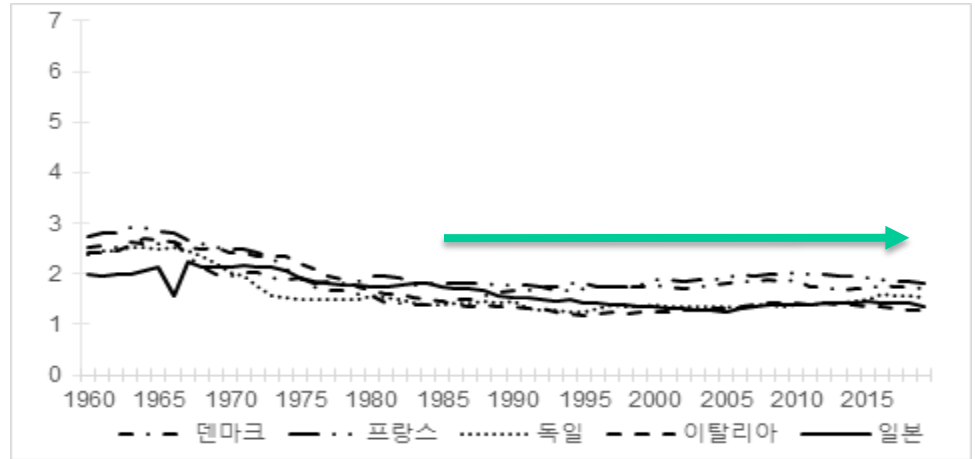
고령인구 비중 증가와 출산율 하락

- 인구의 고령화 가속화,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 1950-2020년



출산율 추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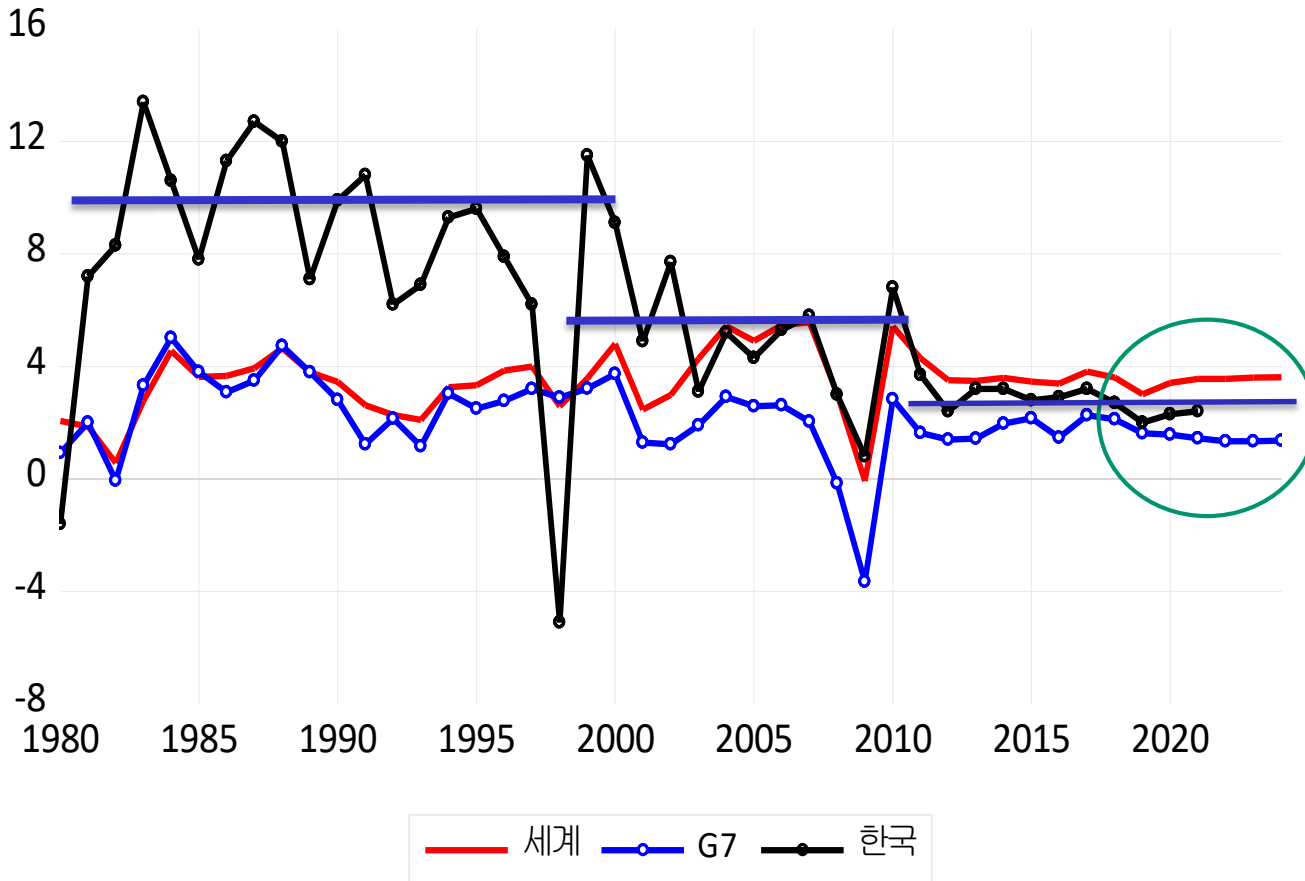
III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주요 특성

한국경제의 GDP 성장률은 단계적으로 하락 추세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단계적으로 하락세
- 201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기 시작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경제 성장률 추이 및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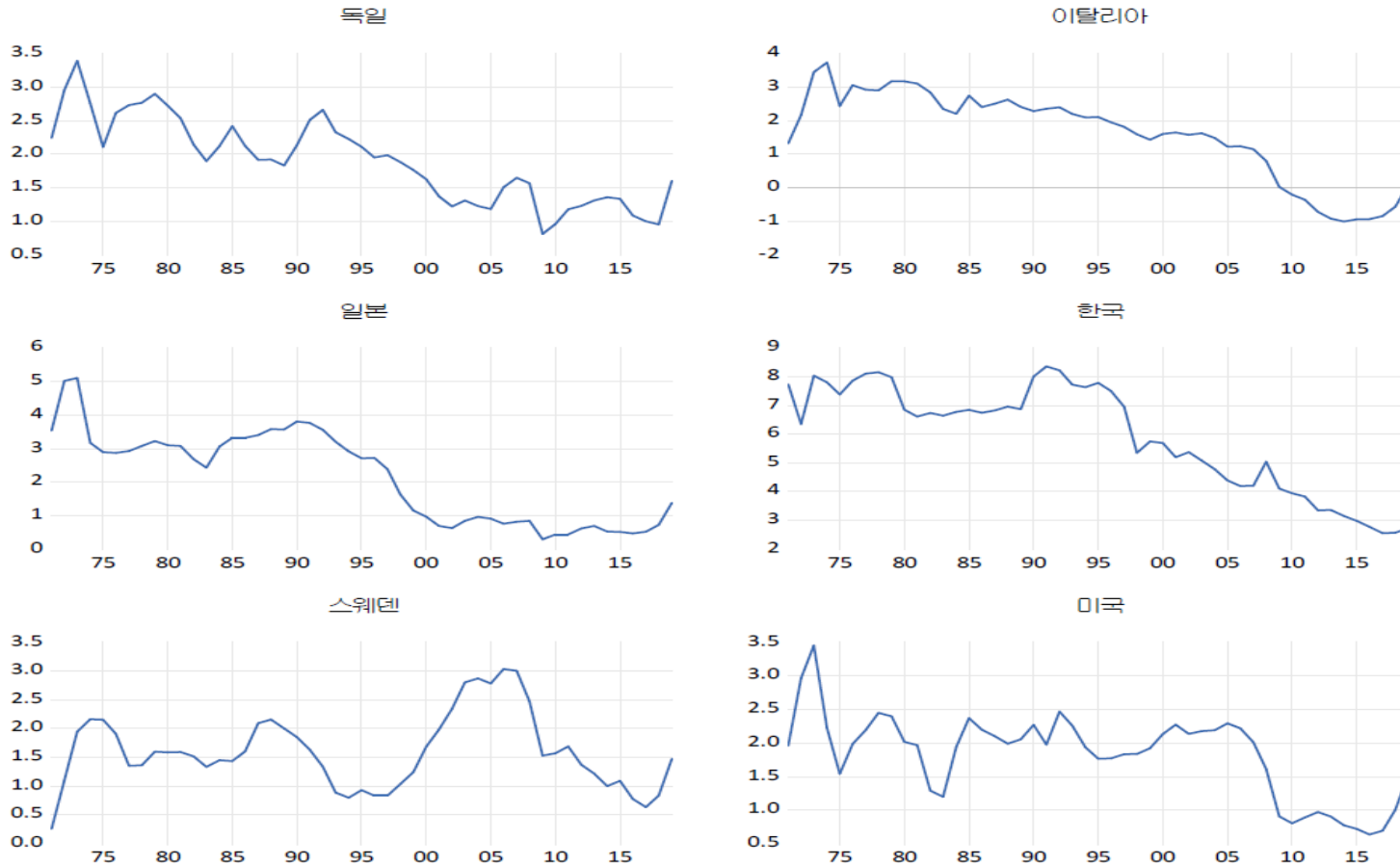


- IMF는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작년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
- IMF는 G7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향후 하락세 전망
- 한국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 상승세를 수용하여 한국경제가 2020년 2.3%, 2021년 2.4%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장기 경제성장률의 선형적 하락

- 1990년대 중반 이후 "5년 1% 하락의 법칙" (김세직, 2016)
- 그는 지난 20년 동안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책이 과잉투자를 초래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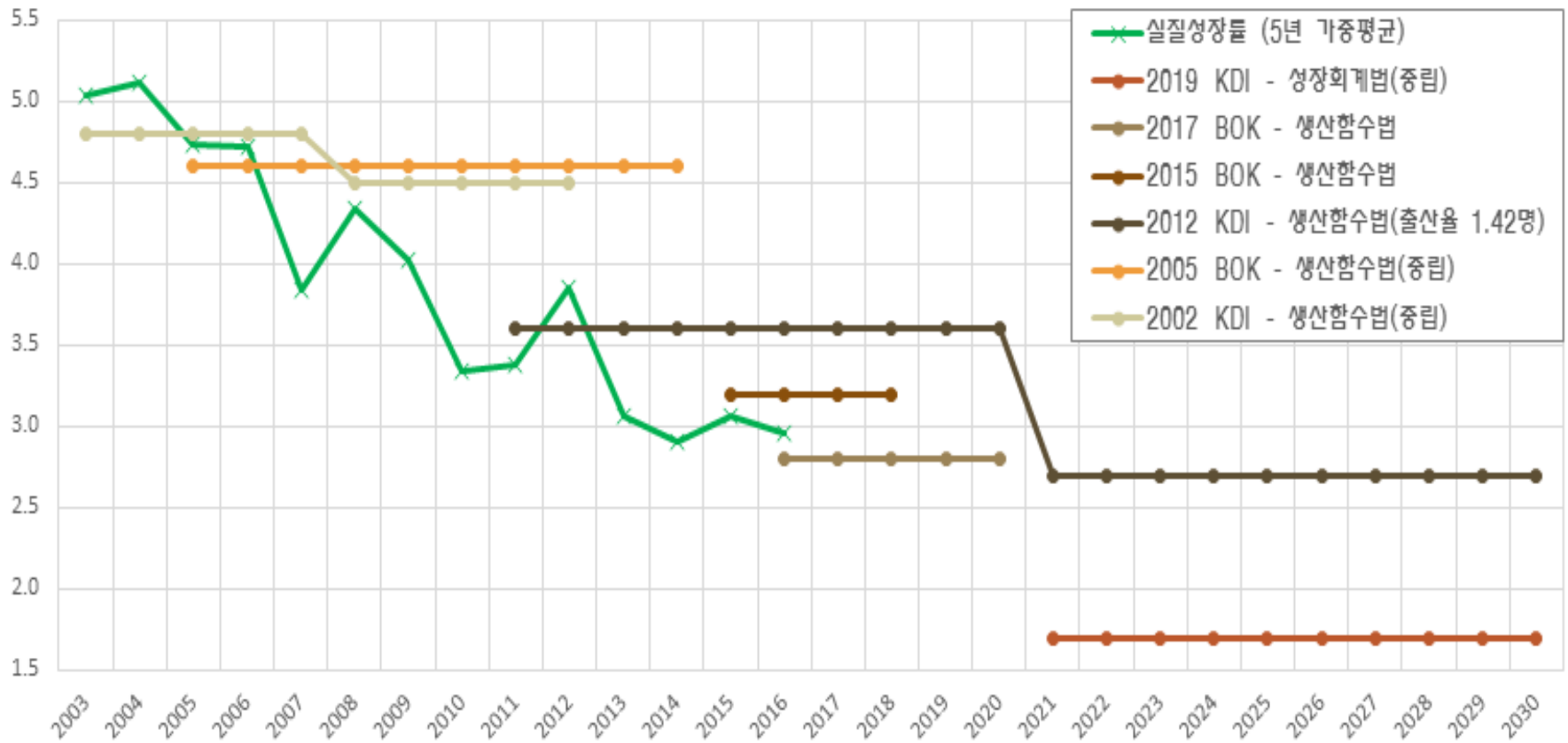
주요국의 장기(10년 이동평균) 경제성장률 추이: 1971~2019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요소 하락, 자본축적 둔화, 신성장동력 부재, R&D 투자 비효율성, 혁신적 인프라 미비 등 잠재 성장률 하락(유종일, 2019)

잠재 성장률 추정치와 실제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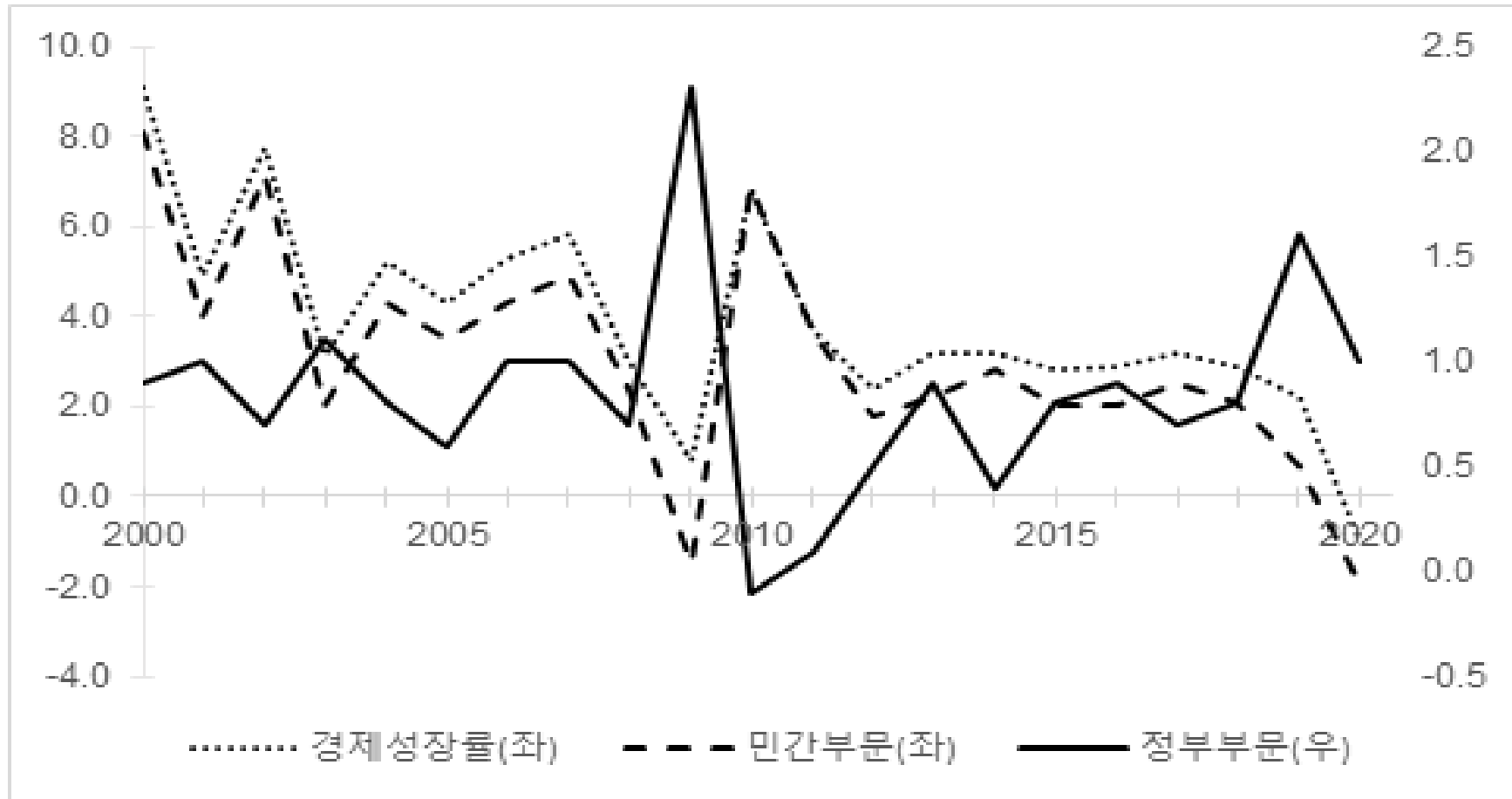


자료: 유종일(2019)

2010년대 이후 2% 내외의 저성장 국면으로 본격 진입

- 2010년대 중반 이후 민간부문의 활력이 떨어지는 대신에 정부지출이 전체 성장을 좌우하는 사실상 '정부주도성장'이 출현

민간과 정부부문의 GDP 성장률(%) 기여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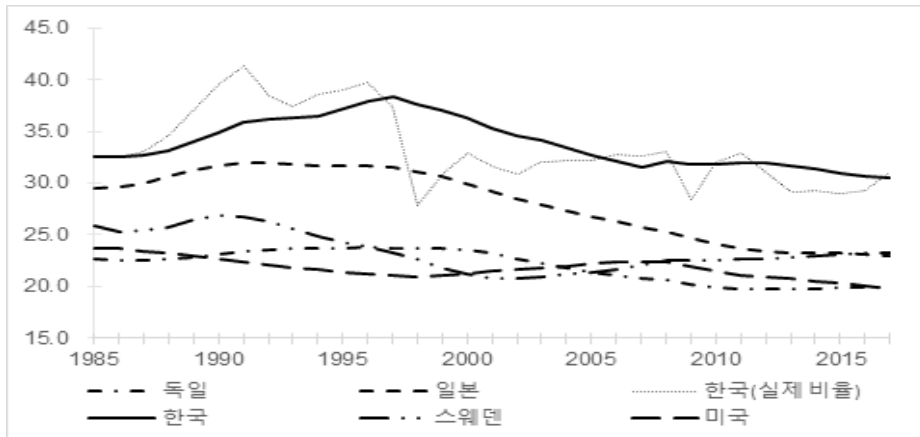


투자율의 추세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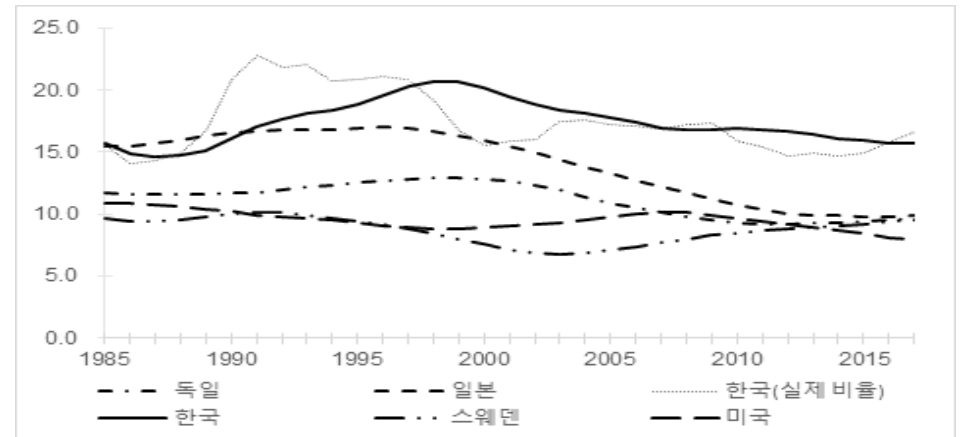
- 한국의 장기 투자율이 1997년 외환위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 투자율이 떨어지는 기울기가 그 이전보다는 덜함.

주요 OECD 국가의 장기(10년 이동평균) 투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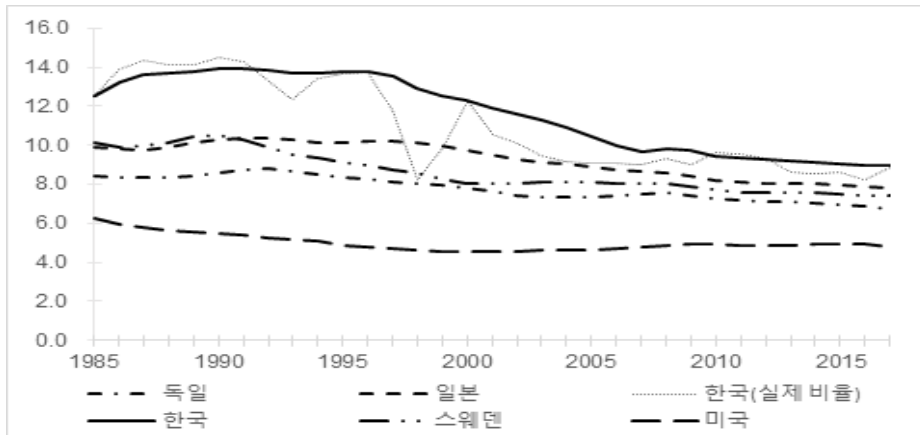
총고정자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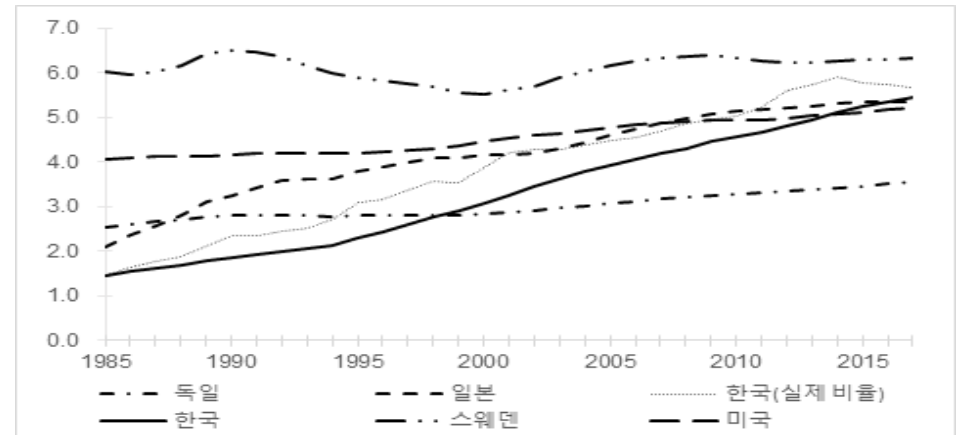
건설 투자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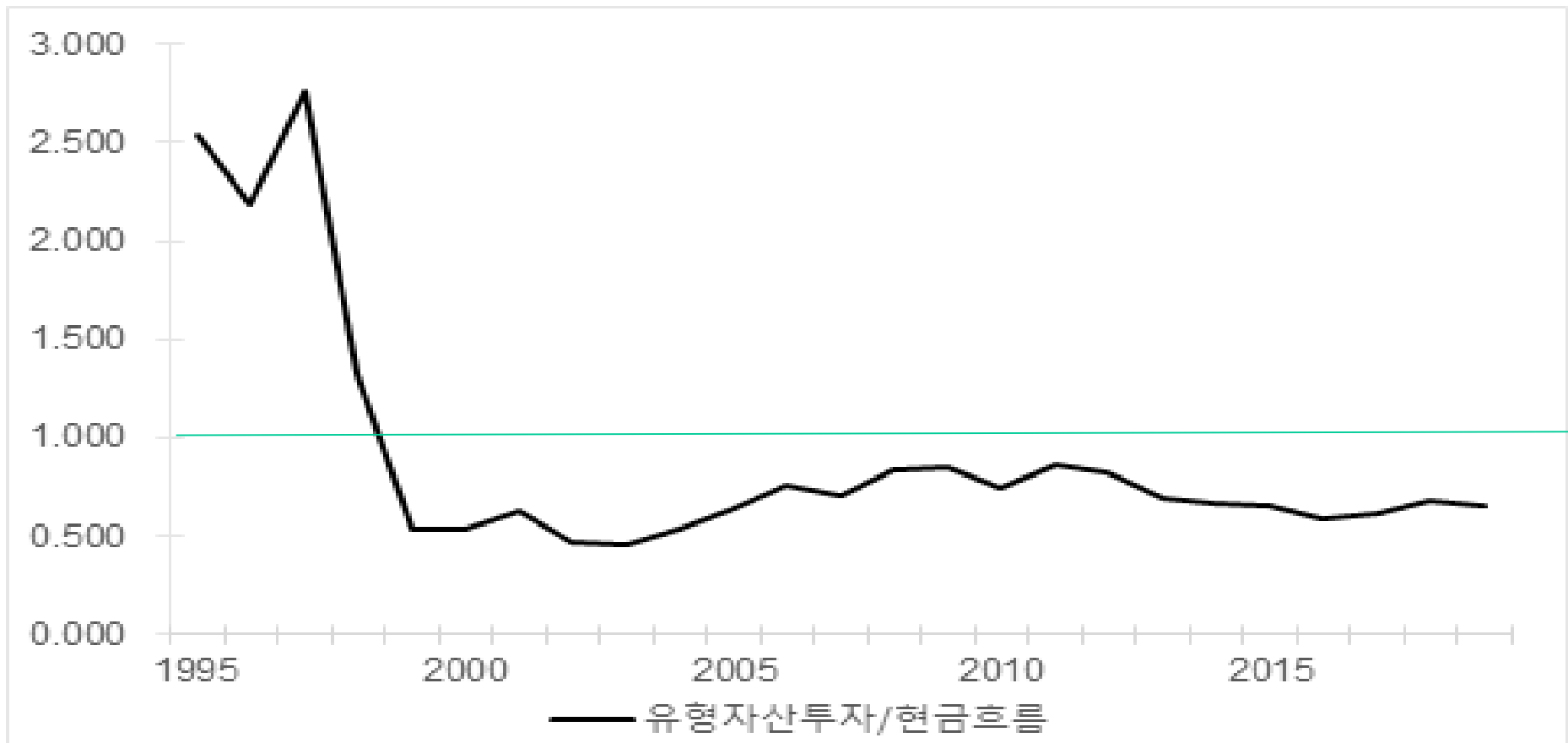
지식 재산



2010년대 이후 제조기업의 투자율은 감소세

- 미시적인 차원의 제조기업의 현금흐름 대비 실제 투자율도 2010년대 이후 감소세

제조기업의 투자(현금흐름 대비 유형 고정자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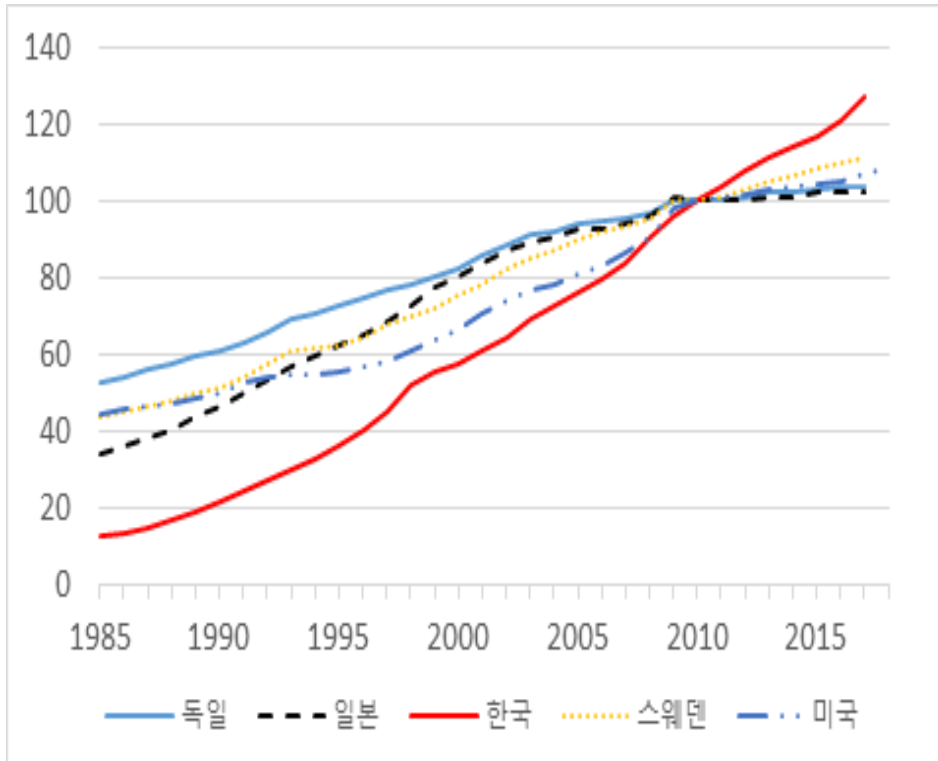


노동 절약적인 자동화 투자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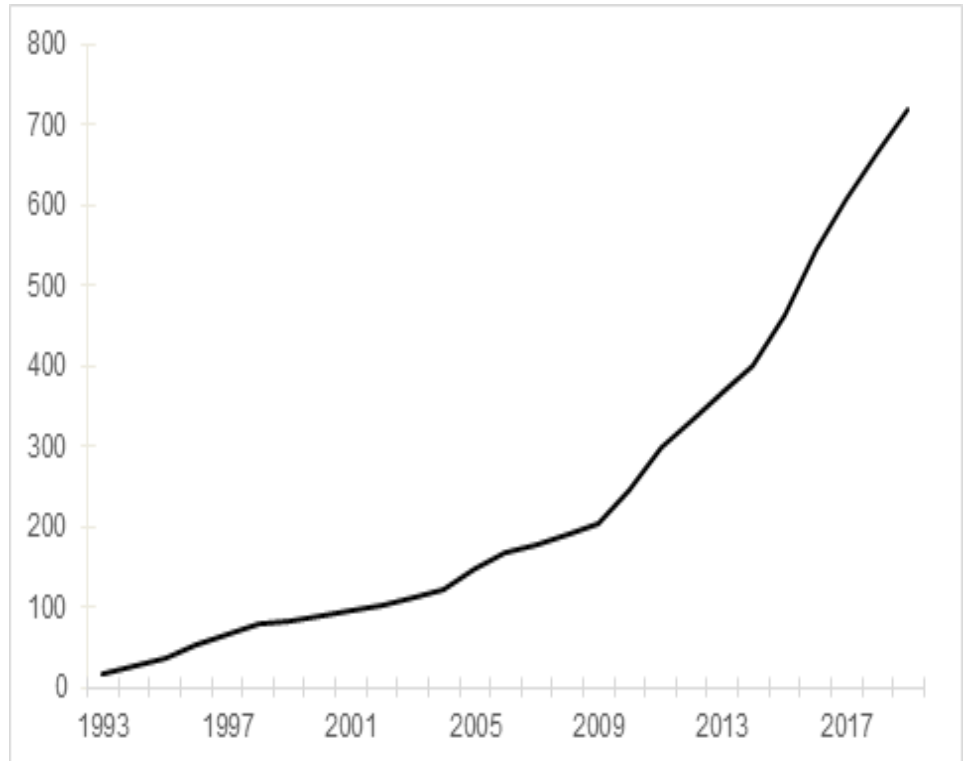
- 한국의 OECD 자본 심화 지수가 2010년대 이후 다른 국가보다 더 높은 편
- 제조업 로봇 밀도의 기울기도 2010년대 이후 더욱더 가파름.

노동 절약적인 투자: 자본심화 지수 및 로봇밀도 추이

OECD 자본심화 지수 추이(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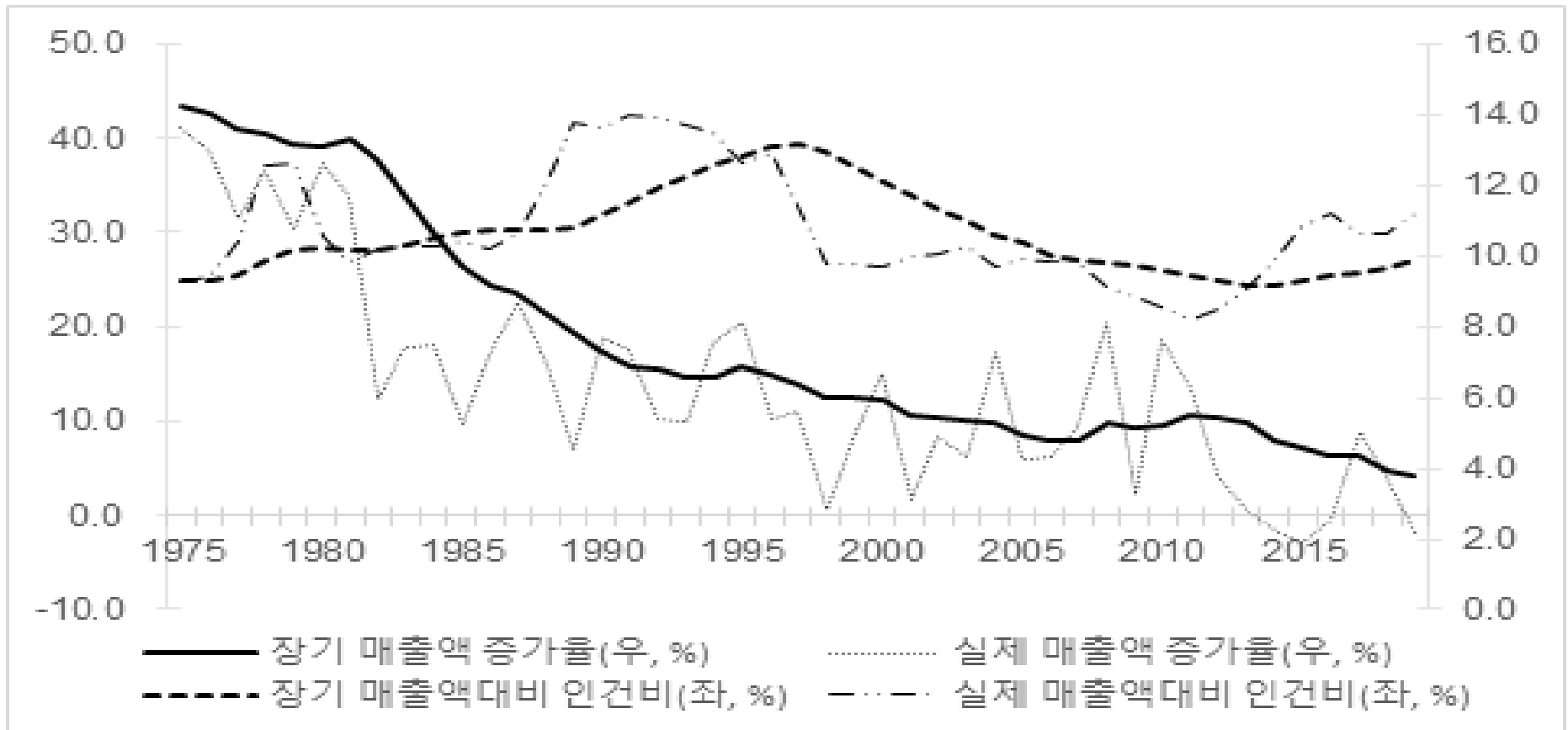
제조업의 로봇밀도 추이



제조기업의 장기 매출액 증가율은 2010년대 선형적 하락

- 노동 대체는 자본재 가격 하락에 따른 첨단 기계장비 용이한 구입, 경쟁 강화를 위한 공정 효율화, 노조 회피 전략, 작업장 숙련 경시 등 여러 요인

제조기업의 인건비 비중(%) 및 매출액 증가(%)의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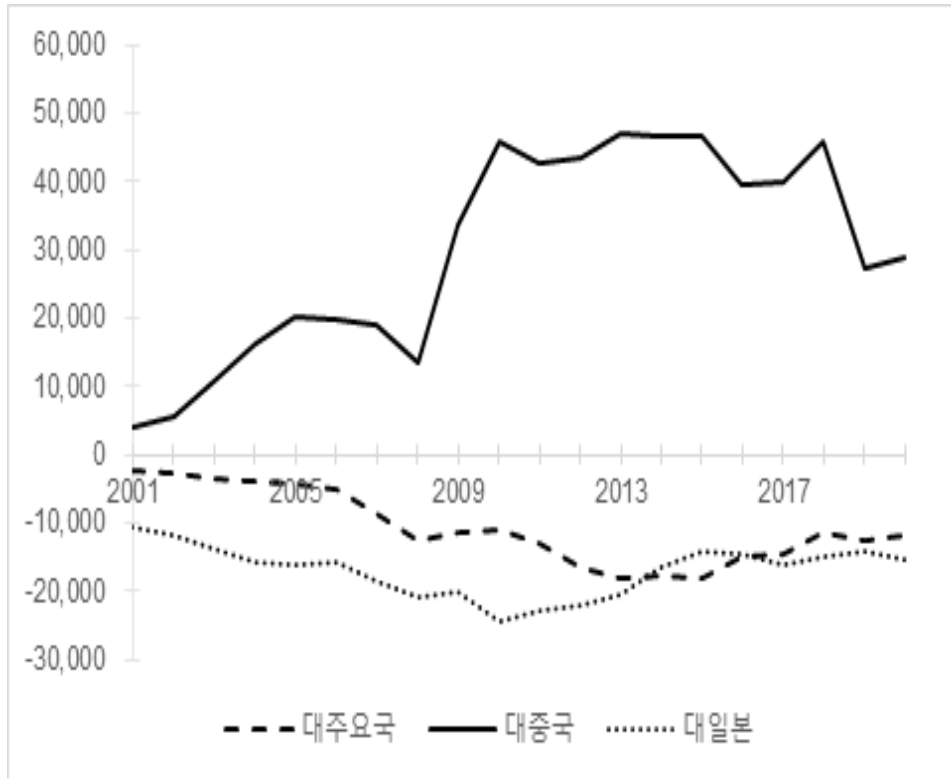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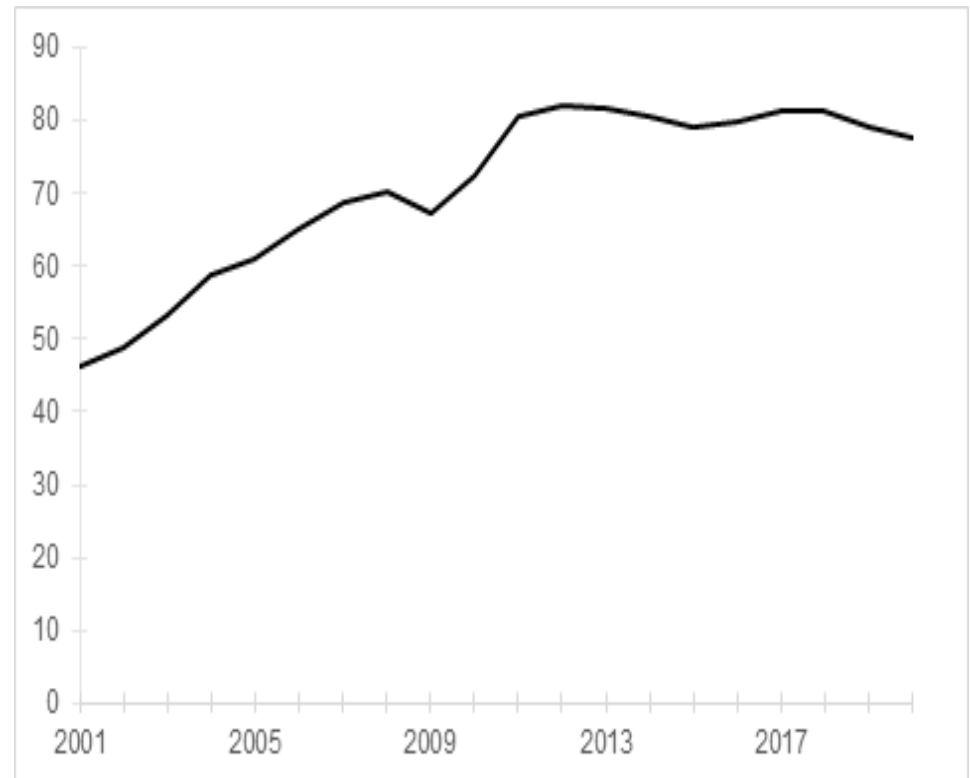
- 2010년대 대중 무역수지 흑자 폭이 더는 늘어나지 않고 횡보하지만 감소 추세
- 부품소재 부문 대일 및 주요국과 무역적자도 계속 증가하다 2010년대 감소세

부품소재 부문의 교역 및 무역 의존도 추이

부품소재 부문의 교역 추이(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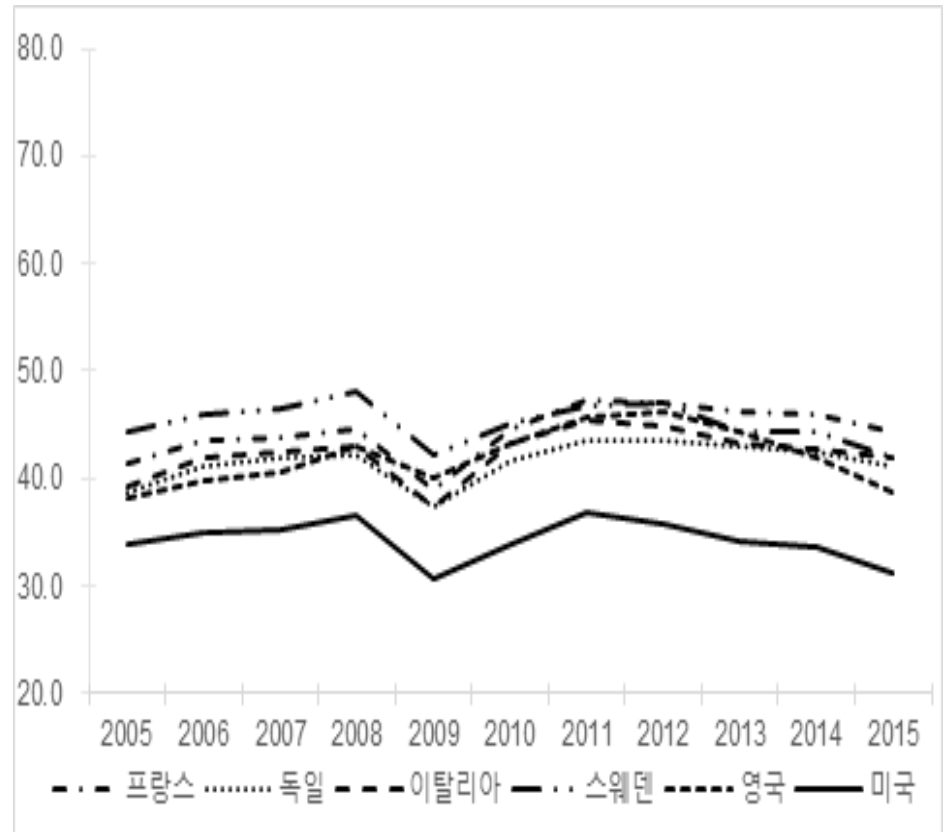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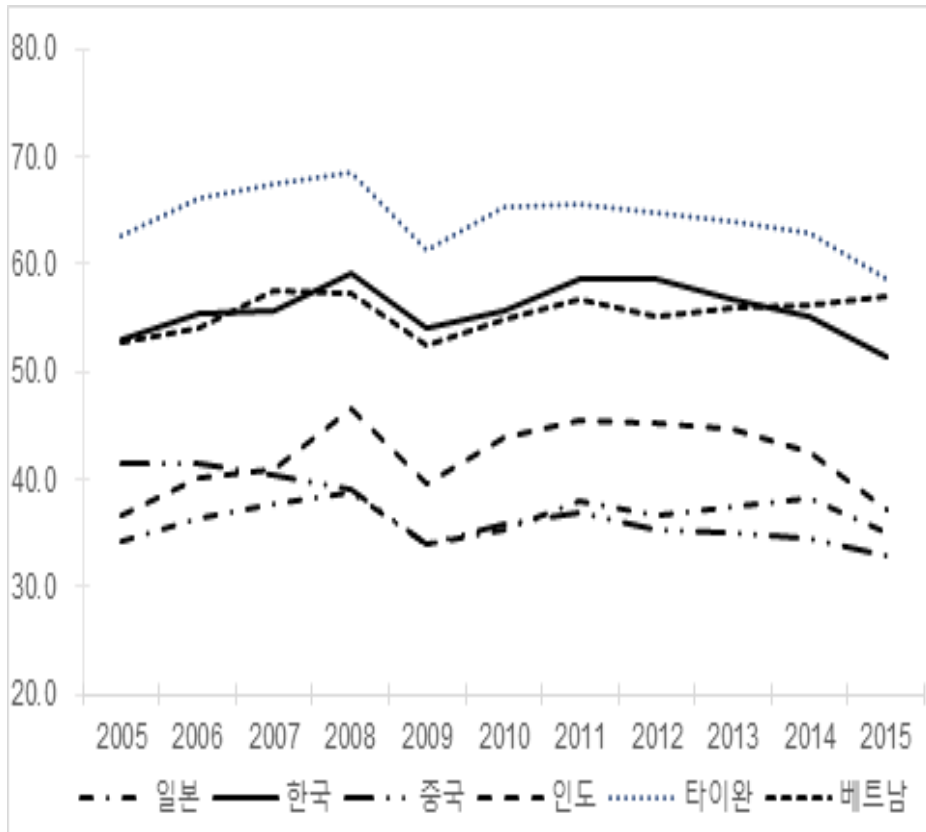
무역 의존도(실질 수출입/실질 GDP) 추이(%)



2010년대 글로벌 가치사슬 변동에서 이전과는 다른 반전

-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 정도(전·후방연계의 합계)가 2010년대에 접어들어 떨어짐.

2010년대 이후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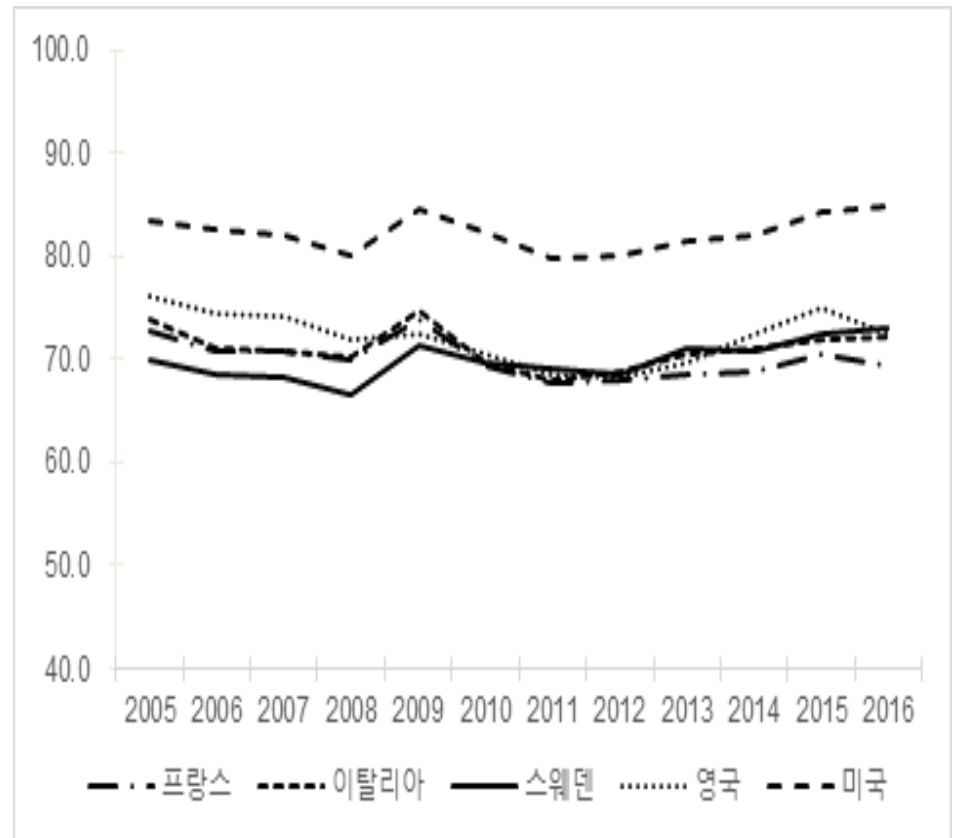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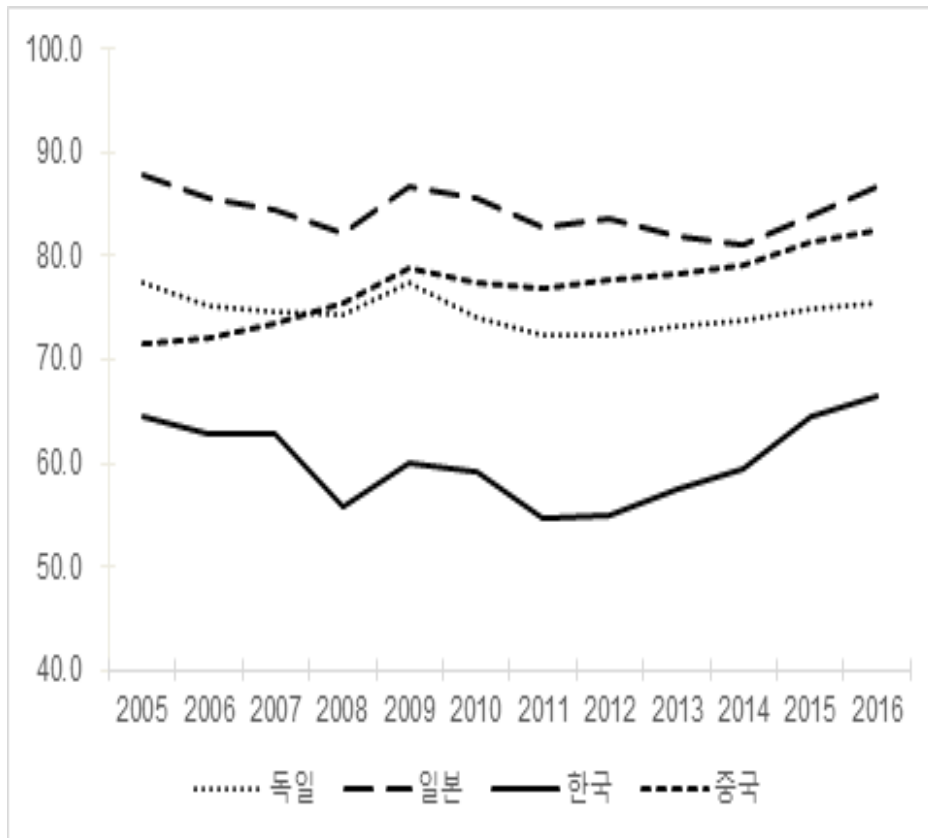


자료: 정준호(2020)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글로벌 아웃소싱에 적극적 참여

- 2010년대 이전 주요 OECD 국가들은 중간재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2010년 이후 이러한 추이는 반전

주요국 제조업 총수출품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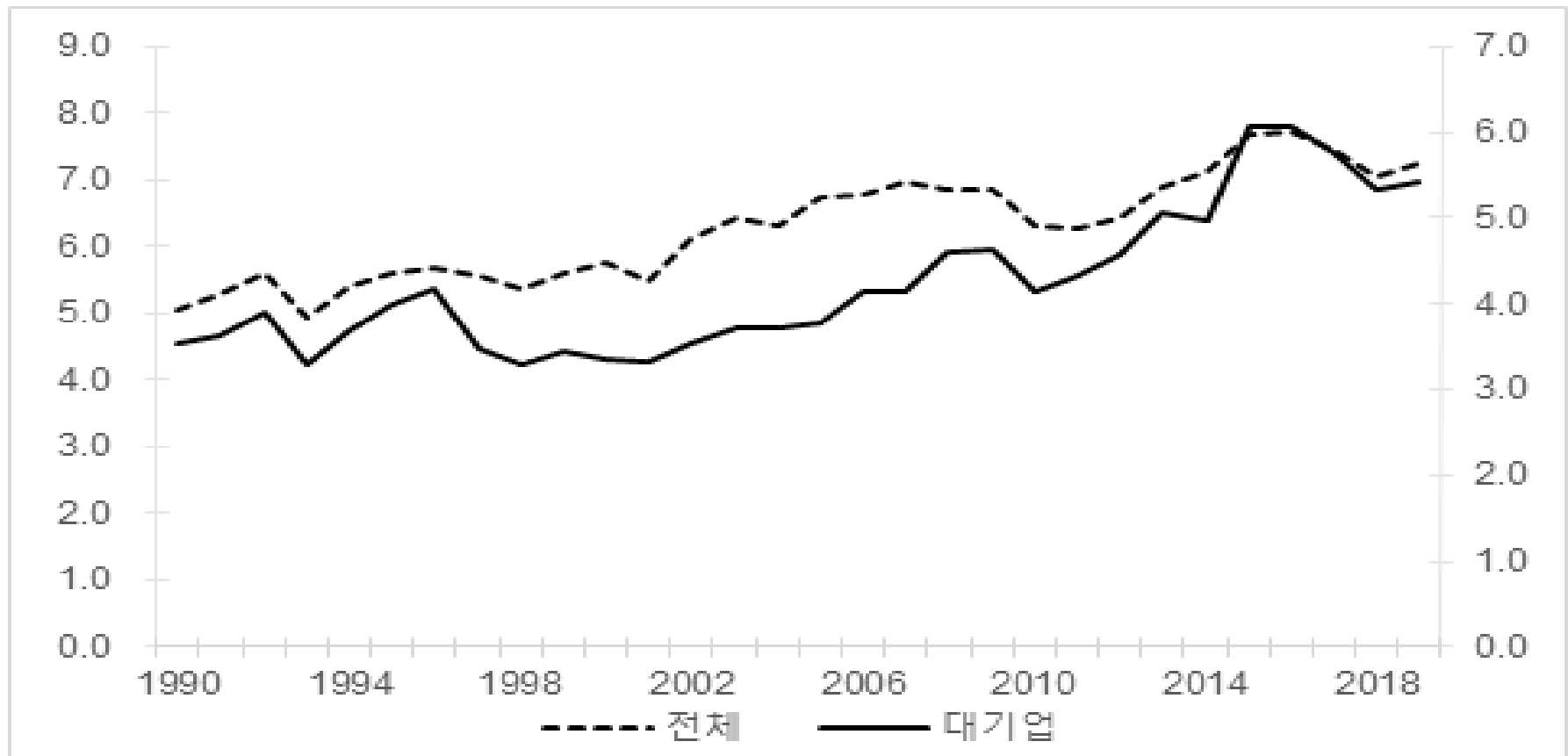


자료: 정준호(2020)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외주화 전략이 널리 활용

- 한국의 주요 대기업은 수요독점 지위를 가진 경우가 많아 원하청 기업 간에 동등한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 거래관계가 형성, 또한 사내 하청도 광범위한 활용

제조기업의 외주가공비 비중(%) 추이



자료: 정준호(2020)

재벌 중심의 산업 생태계: 준수직계열화

- 계열 기업 간에 법적으로는 상이한 기업이지만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준내부화를 통해 재벌 대기업은 이러한 연계의 경제적 편익을 향유

재벌 대기업의 준수직계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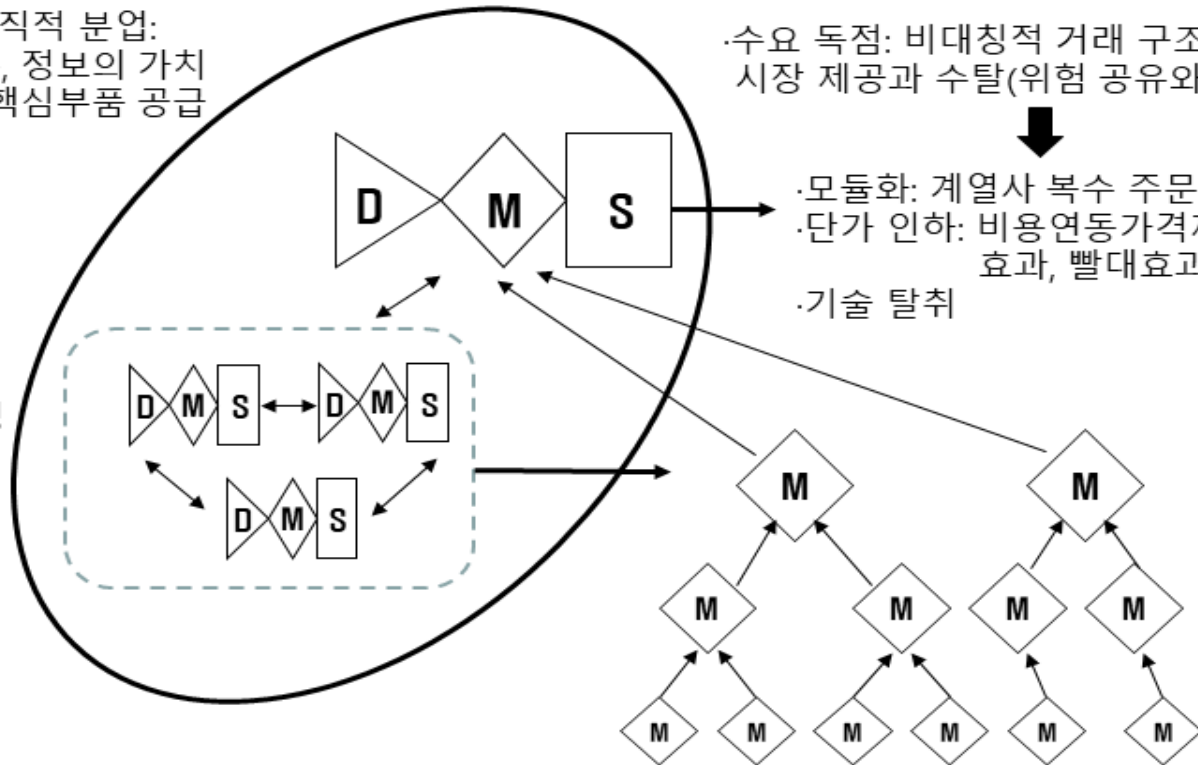
·계열사를 통한 수직적 분업:
·자원과 자산 공유, 정보의 가치
·사슬 전반 지배, 핵심부품 공급

·수요 독점: 비대칭적 거래 구조의 중간재
·시장 제공과 수탈(위험 공유와 전가)



·모듈화: 계열사 복수 주문. 폐쇄적 분업
·단가 인하: 비용연동가격제, 경기 완충
·효과, 빨대효과
·기술 탈취

·내부거래: 효율성
·제고, 기회 축소,
·이익 편취



위계적·전속적·착취적 거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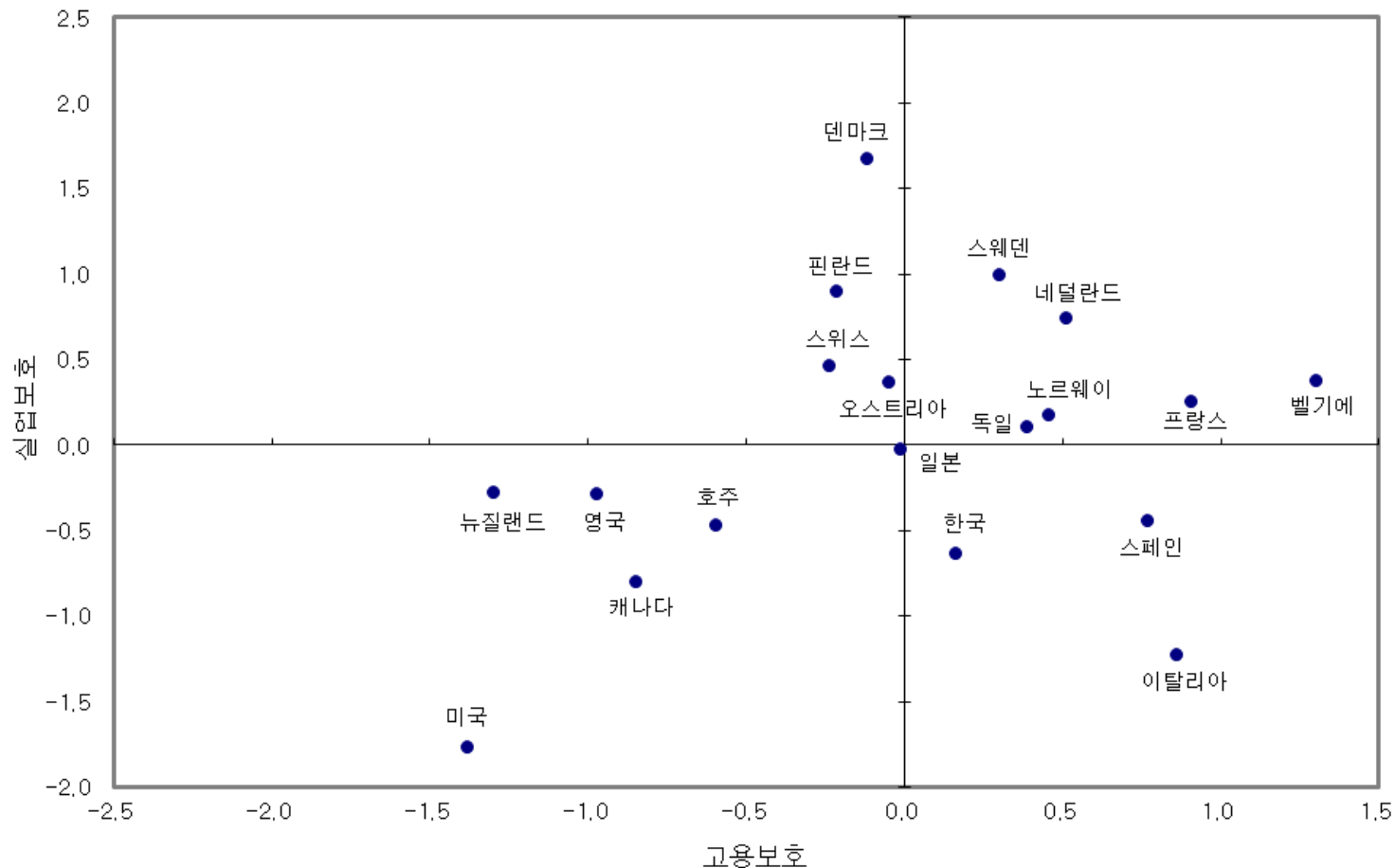
주: D(기획), M(제조), S(판매)를 의미함.

자료: 정준호 · 전병유(2019).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상대적으로 높고 실업보호 수준 낮음

- 숙련은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고리
- 기업특수적 숙련형성을 통해 다각화된 대량생산 전략을 구사

주요 OECD 국가의 생산-복지 체제의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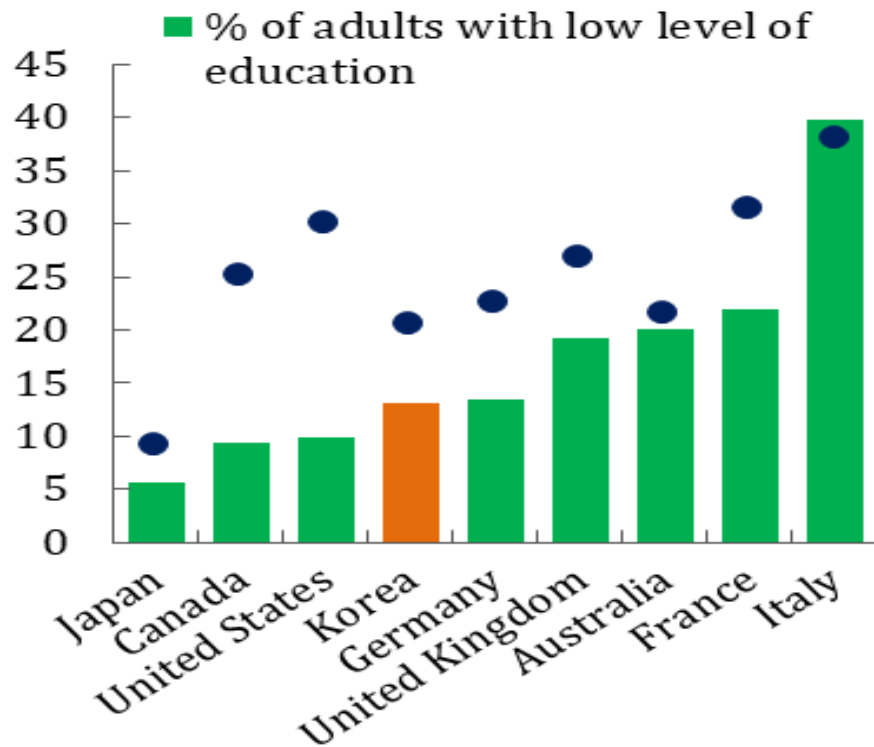
자료: OECD.

숙련의 양극화: 엔지니어 숙련 주도

- 투자주도의 경제는 막대한 고정자본의 구축을 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와 작업장 숙련보다는 생산·공정 중심의 엔지니어 헌신에 의지

숙련의 양극화: 인지적 숙련 비중 저하와 엔지니어링 숙련의 선호

저숙련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다양한 숙련 수요의 비교: 한국 vs OEC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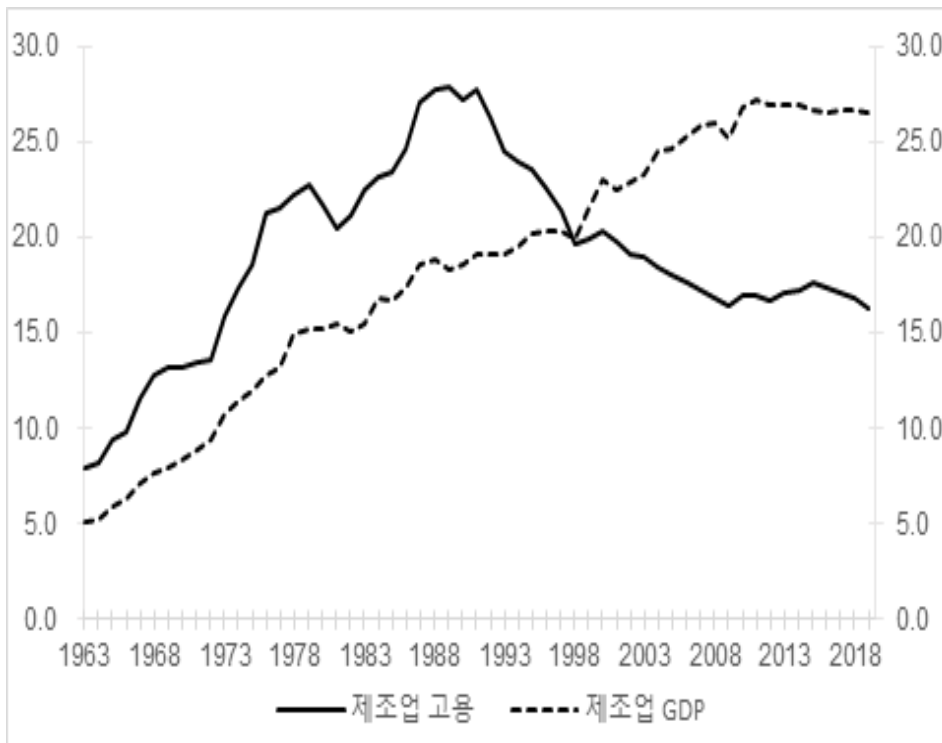
주: 동그라미는 인지 숙련이 낮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정준호 · 전병유(2019).

생산과 고용 비중의 탈동조화와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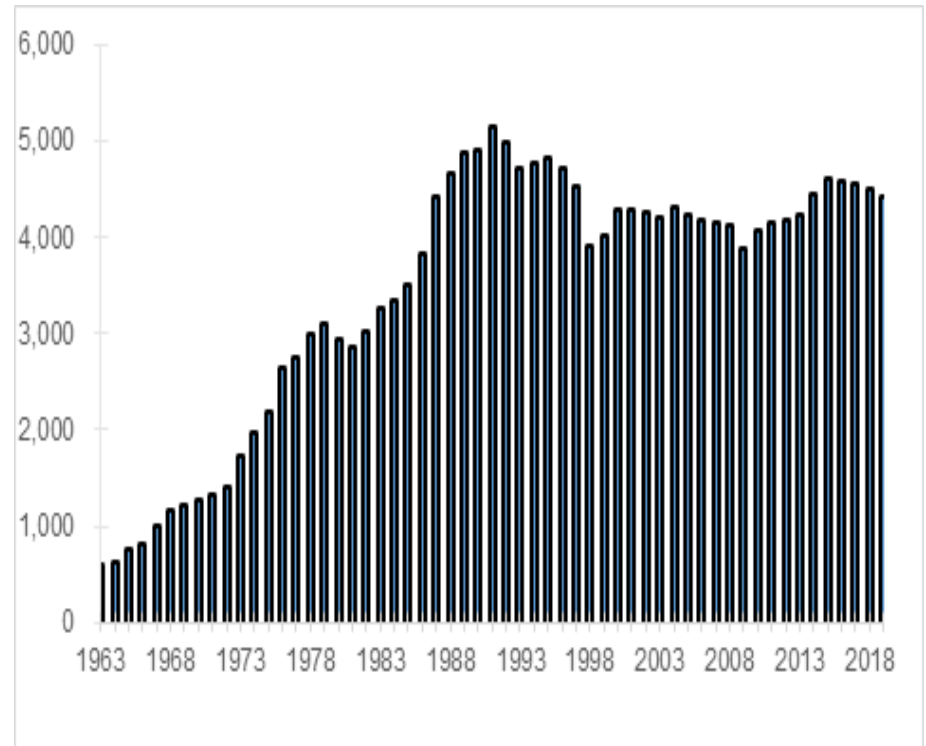
- 제조업에서는 1987년 이후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진행
- 제조업 고용 규모도 최근 다시 감소세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 및 제조업 고용 규모

제조업 고용 및 제조업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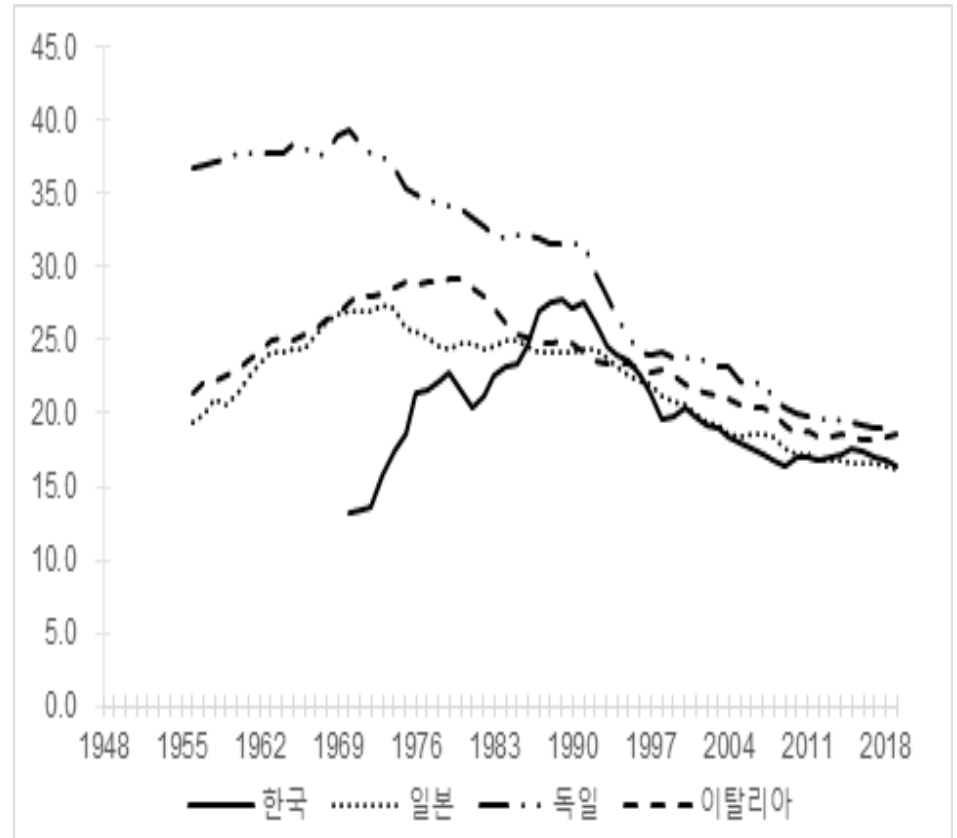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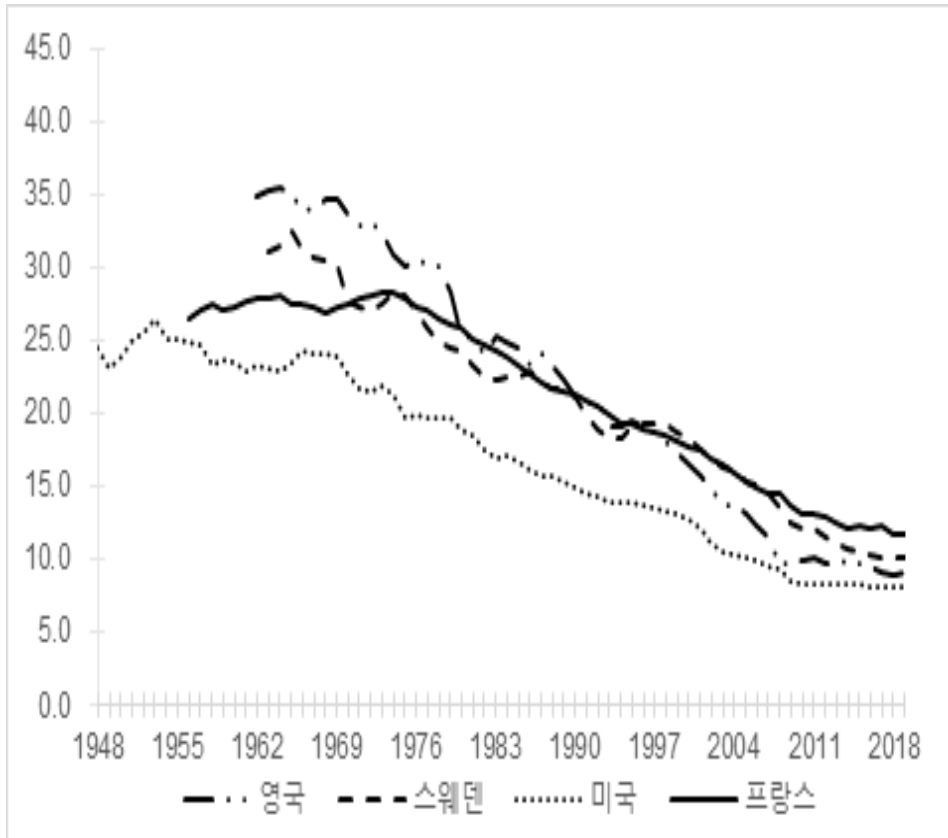
제조업 고용 규모(천명)



생산과 고용 비중의 탈동조화와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2)

- 제조업 고용 비중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빠르게 감소
- 노동은 경영과 숙련형성에서 사실상 배제, 동시에 고용없는 성장으로 이중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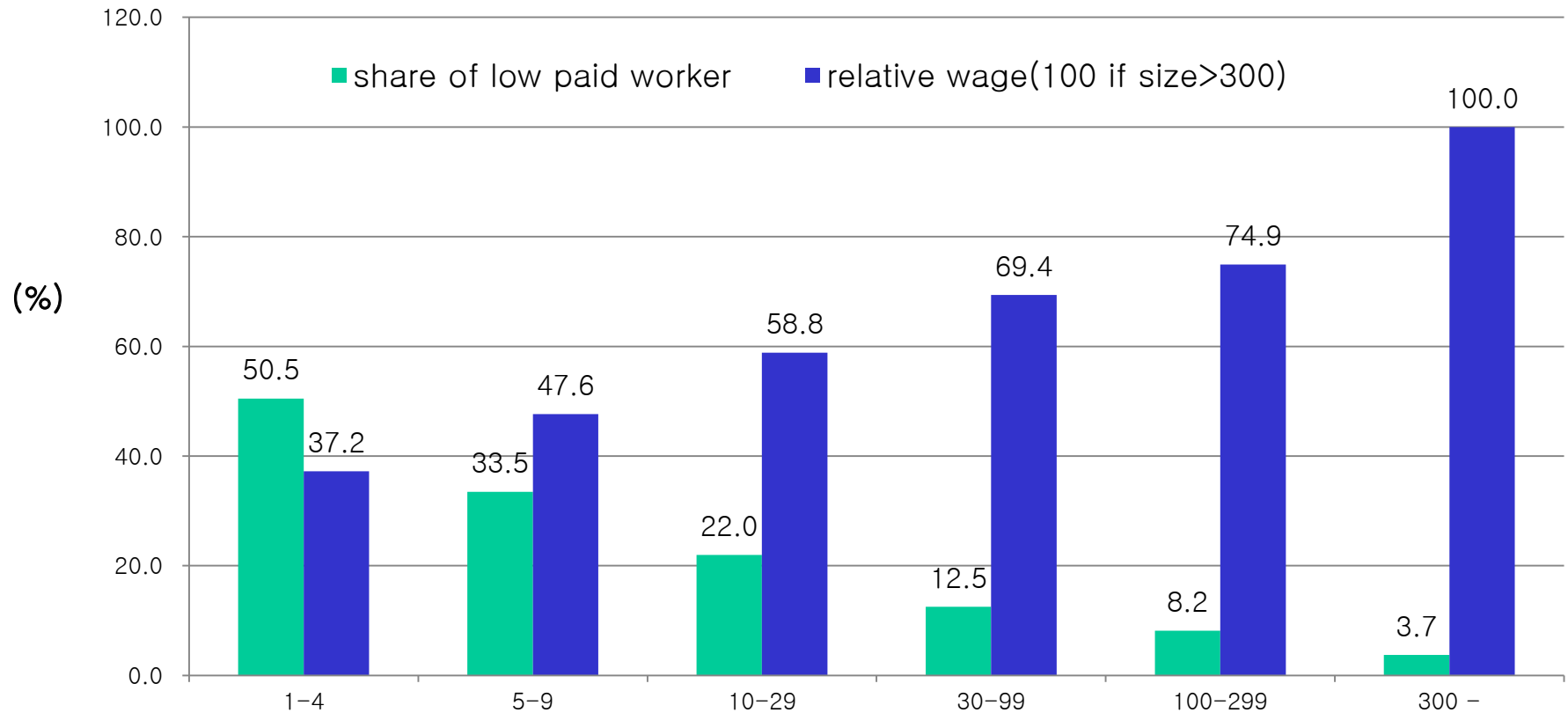
주요 OECD 국가의 제조업 고용 비중(%) 추이



규모별 상대적 임금 수준

- 규모 변수는 노동시장 격차의 가장 중요한 변수

규모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과 상대 임금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100, 2014년)



사업체와 기업 비교

- 통계청의 행정 통계 조사인 임금근로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체 소속 근로자 비중이 43.6%로, 경찰 조사에 비해 크게 높음

사업체 기준과 기업체 기준의 규모별 근로자 수

종사자규모	임금근로 일자리(기업체)		사업체규모별 근로자수(경찰)	
2013년(구성비)	16,496	(100.0)	18,195	(100.0)
1~4인	1,482	(9.0)	3,487	(19.2)
5~9인	1,382	(8.4)	3,186	(17.5)
10~99인	4,519	(27.6)	7,610	(41.8)
100~299인	1,919	(11.6)	1,754	(9.6)
300인 이상	7,194	(43.6)	2,159	(11.9)

비정규직화: 영세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비율 14.3%
-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 소속외근로까지 포함하면 38.3%
- 고용형태공시제: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기업')는 고용형태 공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1년, 3년, 10년,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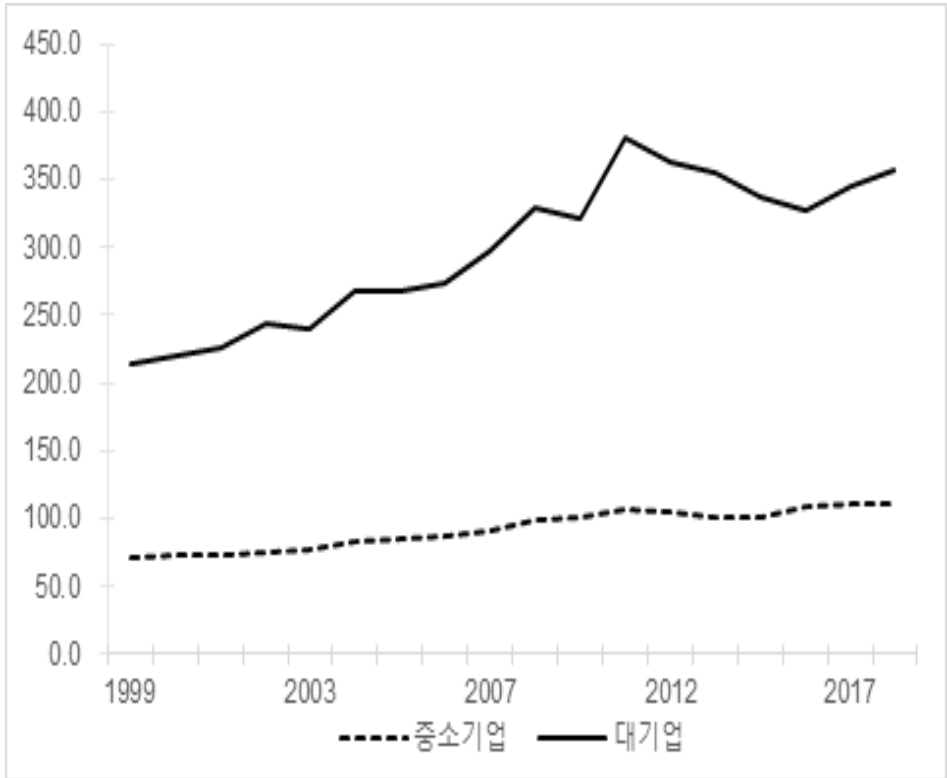
구 분		전체 근로자 (①+②)	직접 고용 근로자①				소속 외 근로자②
			소 계	기간 없음	기간제	기타	
2014	근로자수	4,364	3,486 (100)	2,738 (78.5)	675 (19.4)	73 (2.1)	878
	구성비	100.0	79.9	62.7	15.5	1.7	20.1
2015	근로자수	4,593	3,676 (100)	2,834 (77.1)	842 (22.9)		878
	구성비	100.0	80.0	61.7	18.3		20.0

노동의 이중화 · 양극화: 불안정 노동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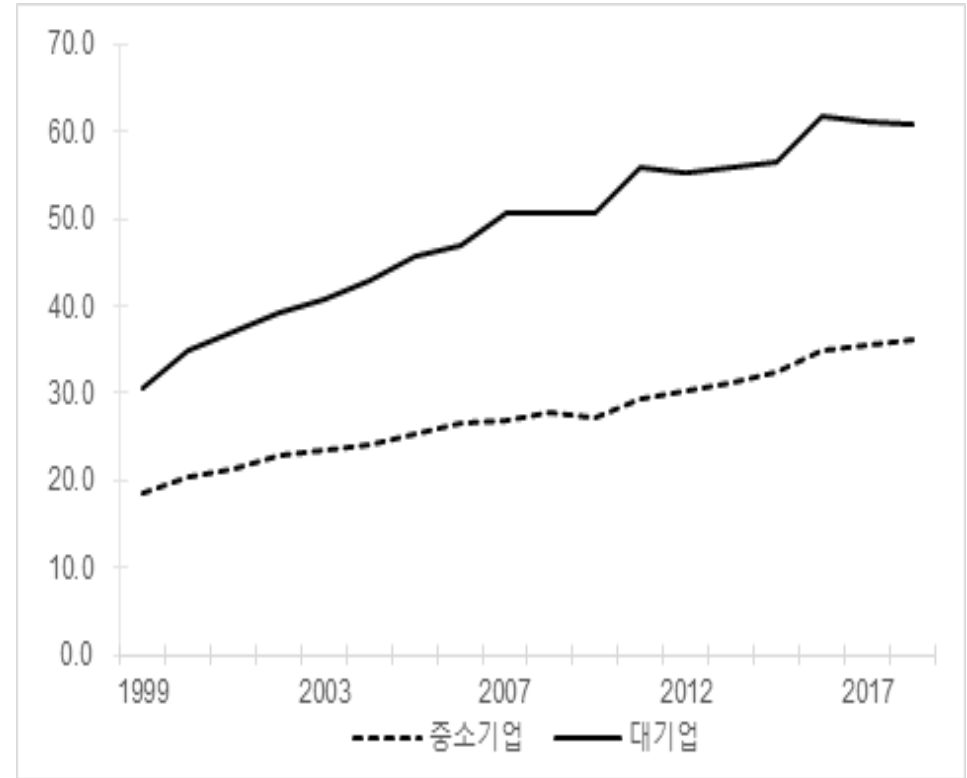
- 규모의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수반
 - 이는 수요독점 대기업과 중소 하청 기업이라는 전속적인 원하청 관계 수반

제조 대 · 중소기업의 실질 1인당 부가가치와 연간 급여액 추이(단위: 백만 원)

1인당 부가가치



1인당 연간 급여액(퇴직금 제외)



자료: 정준호(2020).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 및 노동 이중화: 산업-노동체제

- 억압적인 노동 배제는 다르게 전개되어 **전투적인 노동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대기업은 자동화를 과도하게 추구
- 대기업은 작업장 수준의 숙련 형성을 주변화하면서 **엔지니어 중심의 공정 합리화와 효율성**을 극단적 추구
- 현장 숙련을 배제한 자동화 설비투자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설비 가동률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간 노동**이 자연스럽게 요구
- **지루하고 힘든 작업공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자동화 투자는 **노조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작업장 숙련이 경시되면서 **IT 기반의 자동화**는 **제품의 품질수준을 균등화**시키는 기제
- 2000년대 세계적 호황으로 가공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재벌 대기업**은 **노조와 암묵 또는 명시적으로 자동화 설비투자-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활용 등에 동의**하고 그 대신 **노조는 경제적 실리를 챙김**.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 및 노동 이중화: 산업-노동체제

- 사내하청이나 사외하청기업을 통한 수량적 유연성이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IT기술과 결합한 모듈화는 재벌 대기업에게 하청기업들을 계층별로 선택적으로 포섭하고 배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
- 극단적인 IT기반 자동화는 탈숙련과 노동의 배제를 야기하며, 현장숙련의 경시와 비용절감 때문에 아웃소싱이 심화되면서 비정규직이 노동유연화 전략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
- 이러한 ‘자동화-아웃소싱-탈숙련 및 노동의 이중화’에 기초한 산업-노동체제는 재벌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또는 준수직계열화로 이어짐.
- 문제는 자동화에 의한 숙련의 대체 및 모듈화와 아웃소싱이 정치적 매개가 없이 과도하고 왜곡되고 불공정한 형태로 진행된 것임.
- EU 국가들의 제도화된 이중화와는 달리 고용형태상의 노동 유연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이중화라기보다는 산업생산체제에서의 특수성에 의해 강하게 규정받는 형태의 노동시장 이중화임.

이중화/양극화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의 양극화/이중화의 한 단면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의 이중화/양극화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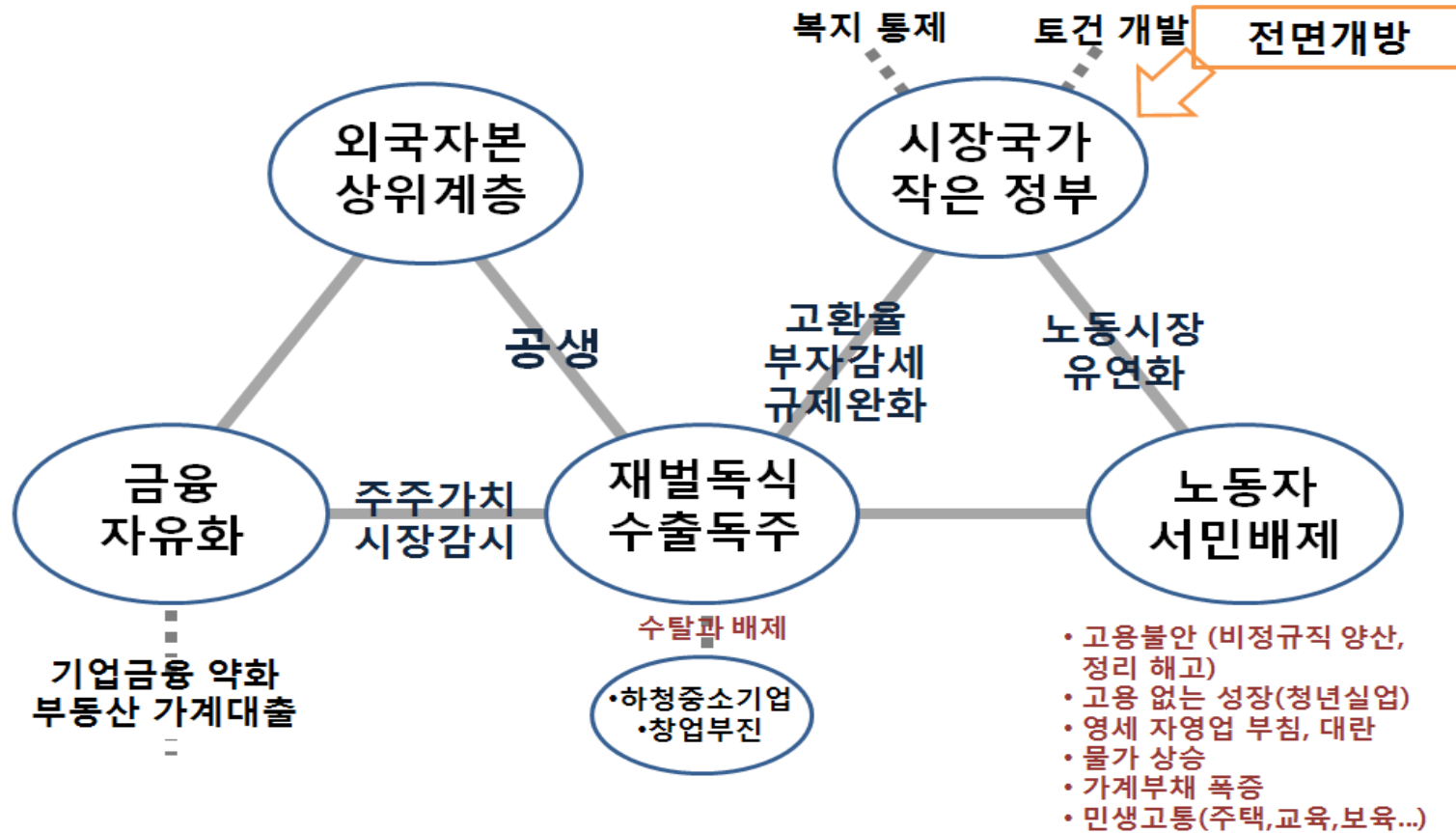
구분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산업발전	· 복선형 산업화 지배적	· 조립형 산업화 지배적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 기업규모별 외부 이중화: 대기업은 내부 노동시장,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음. · 노동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기업별 노사관계, 전투적 노조	· 사내하청을 통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기업 내부의 외부화 및 외부 이중화의 심화 · 선별적인 노동 포섭과 배제적인 기업별 노사관계
기업 간 관계	· 위계적 하청: 재벌 계열사의 확대 수단과 경기변동 완충장치로 활용 · 시장의 미성숙과 재벌 계열사의 확장 가능성으로 인한 온정주의적인 공급자 보호	· 배제와 포섭을 수반하는 위계적 하청: 합리화 및 비용절감에 대한 강한 요구 · 모듈화에 따른 핵심과 주변 공급자의 구분 등장
숙련형성	· 내부노동시장, 훈련에 기반한 기업특수적인 숙련 · 전투적인 강한 노조로 인한 약한 유연성 추구	· 숙련 절약적인 IT기반 자동화를 활용하면서 기업특수 숙련체제에서 일반 숙련체제로 이행하는 양상이 등장 · 비정규직을 활용한 기업 내 강력한 유연성 추구

VI

양극화(이중화)를 둘러싼 제도적 배치

성장 체제 개혁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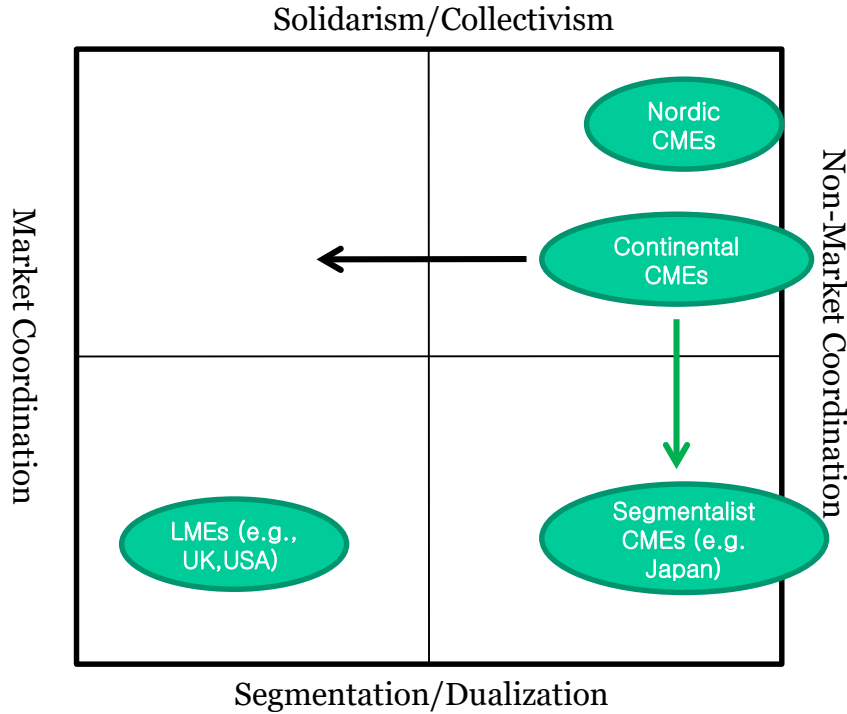
배제적 이중화 성장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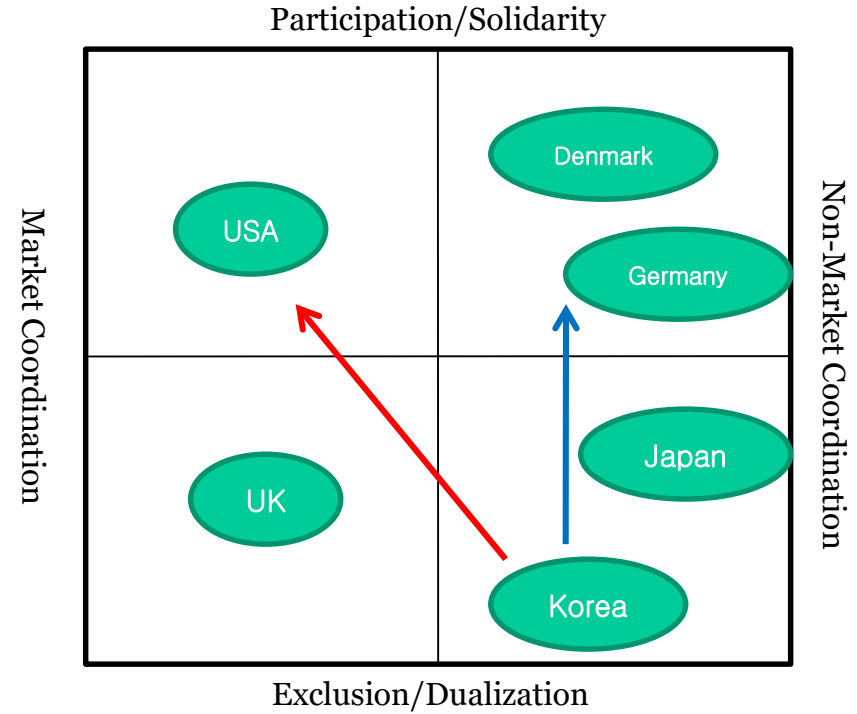
- 위 그림은 강원대 명예교수인 이병천 교수님의 10여년 전 한국경제에 관한 요약
- 위 그림에서 어느 하나 개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가?

양극화(이중화)를 둘러싼 제도적 배치

제도적 변화의 정치 경제



Source: Thele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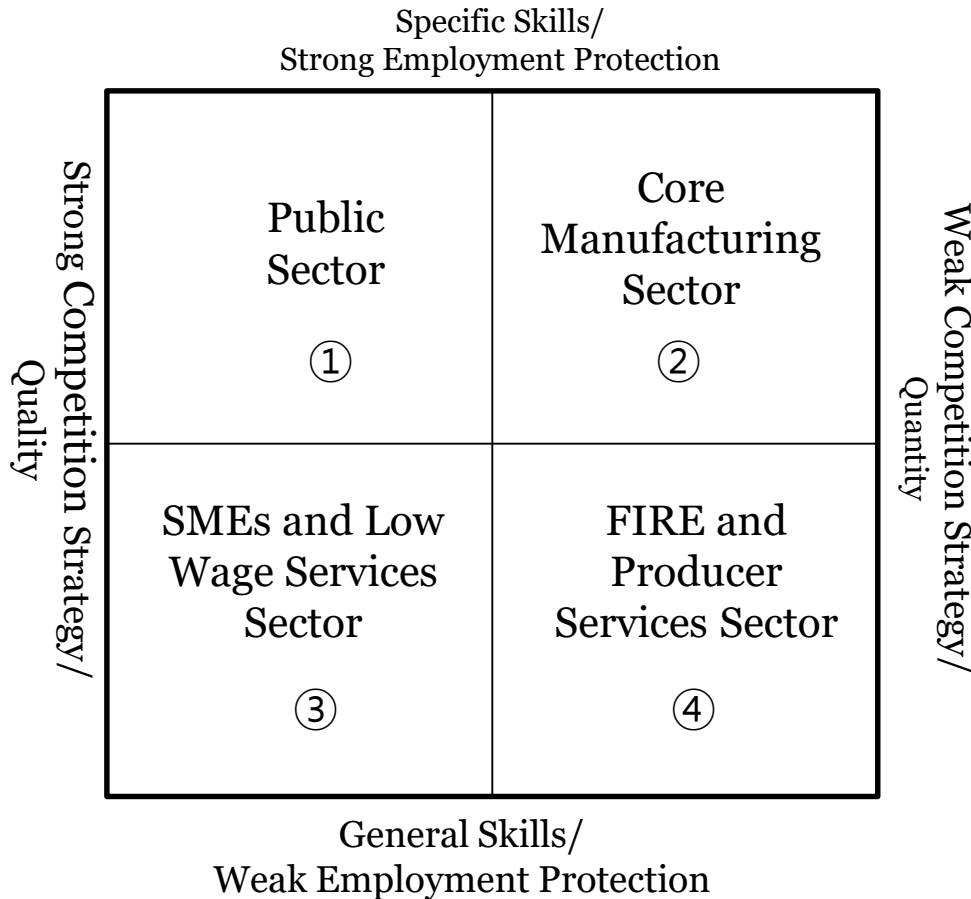


Source: Lee and Jeong (2011)

- 생산체제 특성을 반영한 후자의 모형에 따르면 한국은 양극화 또는 이중화를 해소하는 크게 두 가지 경로 중의 하나를 고려할 수 있음.
- 세부적으로는 미국, 독일, 일본, 발전국가 퇴행의 길이 놓여 있음.

가능한 정치적 제휴의 조합

가능한 정치적 제휴: 네 가지 옵션



Source: Adapted from Swank et al. (2008)

Possible Political Coalitions

Neo-liberal Option	②+④
Solidaristic Option	①+②+③
Segmentalist Option	①+②
Dualistic Polarization Option	①+②+④

Source: Adapted from Lee and Jeong (2011)

- 은폐된 또는 대체된 계급 분할의 형태로서 이중화 또는 양극화 심화 가능성 (?)

감사합니다 !